

## AURI POLICY UPDATES

#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19  
2014. 8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4.7.1~7.31)

### 건축문화 부문

- 경기도,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모색
- 제23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모
- 서울시,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서울시가 만드는 도시재생 작은 전시
- '우리에게 이야기 들어볼래?' ... 경기 베스트 간판 대상
- 2014 인천시 건축상 공모
- 광고 호수공원, 올해 '최고의 경관'
- '신진건축사 아이디어공모전' 상반기 당선작 확정
- 경기도 건축명소 담은 책 나와
-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 전에 '사전 디자인 자문' 받으세요
- 제6회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 및 전시회 가져
- 성공적 도시 재생사업 방안 논의
- 지역문화계의 오랜 숙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 '2014년 공정조경 우수기업' 공모
- 서울시, 육백년 도성의 역사를 품은 '한양도성박물관' 개관

### 녹색 건축·도시 부문

- 경기도청 건물에 에너지 아끼는 '그린 리모델링 기술' 적용
-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소비 전년보다 줄었다
- 정부대전청사 콘크리트 광장이 생태휴식공간으로
- 서울시, 서울대와 함께 조성한 옥상녹화로 국제환경상 수상
- 서울시, 마을 녹화활동 펼칠 '조경리더' 140명 양성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서울시, 금천구 소공장 밀집지대에 '범죄예방디자인'
- 차보다 사람 우선 '보행자우선도로' 시내 10개소로 확대
- 부산시,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부산물 만들기 시동
-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 북촌현장, '북촌, 아름다운 약속' 선포로 마을공동체 새 지평 연다
-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 추진
-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경제기반 창출 전략 제시
- 행복주택 사업 본궤도 진입!
-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사업모델 시동
- 숫자로 보는 '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공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다!
- 건설현장, 시공부터 준공까지 '안전 집중관리'
- '공간정보 인제 육성·지원사업' 협약 체결
- 뉴타운 해제 '창신·송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 'HOPE 프로젝트'로 희망을 건축한다!
- 젊은 계층이 사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까지

## 이슈와 연구동향 #9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8월호 (통권 19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4. 8. 25
  - 발행인 : 제해성
  - I S S 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 건축문화 부문

- 8 경기도,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모색
- 8 제23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모
- 8 시민 문화향유 거점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본격 추진
- 9 생활 주변의 '숨은 디자인' 보물을 찾아라!
- 10 서울시,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11 서울시가 만드는 도시재생 작은 전시
- 11 '우리가게 이야기 들어볼래?'... 경기 베스트 간판 대상
- 12 2014 인천시 건축상 공모
- 12 광교 호수공원, 올해 '최고의 경관'
- 13 '신진건축사 아이디어공모전' 상반기 당선작 확정
- 15 서울시 '50년 도시정책 수출' 온라인 사이트 16일 오픈
- 16 경기도 건축명소 담은 책 나와
- 16 대구환경공단,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 참여
- 17 남경필 지사, 따복마을 만들기 주제로 대화마당 열어
- 17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 전에 '사전 디자인 자문' 받으세요
- 18 광주시청사 시민공간으로 재단장 한다
- 19 서울시,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도시 서울을 위한 디자인 47점 선정
- 20 제6회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 및 전시회 가져
- 20 성공적 도시 재생사업 방안 논의
- 20 서울시, '한양도성 학술총서'로 한양도성의 가치 재정립
- 21 지역문화계의 오랜 숙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 22 서울시, 200여개 기업 · 기관과 '도시정책 해외진출' 공동 모색
- 23 경북도, 친환경 주거문화 대안으로 신 한옥 제시
- 24 산복도로 여행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 한자리에
- 25 '2014년 공장조경 우수기업' 공모
- 25 서울시, 육백년 도성의 역사를 품은 '한양도성박물관' 개관

## 녹색건축·도시 부문

- 27 경기도청 건물에 에너지 아끼는 '그린 리모델링 기술' 적용
- 27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소비 전년보다 줄었다
- 28 정부대전청사 콘크리트 광장이 생태휴식공간으로
- 29 서울시, 서울대와 함께 조성한 옥상녹화로 국제환경상 수상
- 30 서울시, 마을 녹화활동 펼칠 '조경리더' 140명 양성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31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 32 서울시, 금천구 소공장 밀집지대에 '범죄예방디자인'
- 32 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국비 640억 투자
- 33 차보다 사람 우선 '보행자우선도로' 시내 10개소로 확대
- 34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 35 부산시,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부산 만들기 시동
- 36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 37 서울시, 한옥밀집지 서촌 '주민주도 마을재생사업'
- 38 북촌헌장, '북촌, 아름다운 약속' 선포로 마을공동체 새 지평 연다
- 38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 39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 추진
- 40 서1동 희망오차마을공동체를 소개합니다!
- 40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경제기반 창출 전략 제시
- 41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
- 42 부산시,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 본격 가동
- 43 행복주택 사업 본궤도 진입!
- 44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
- 44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 45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사업모델 시동
- 46 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 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
- 47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47 숫자로 보는 '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 48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 설문조사 실시
- 49 저소득 주민의 오래되고 노후한 주택을 고쳐드립니다
- 49 상반기 우리국토 얼마나 변했을까?
- 50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공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다!
- 51 건설현장, 시공부터 준공까지 '안전 집중관리'
- 51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가능할 듯 따복마을 탄력 받아
- 52 '공간정보 인재 육성·지원사업' 협약 체결
- 53 당신의 아이디어가 곧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53 체육시설 가장 필요한 지역은? '서울 정책지도' 개발
- 54 뉴타운 해제 '창신·송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 56 'HOPE 프로젝트'로 희망을 건축한다!
- 57 젊은 계층이 사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까지
- 5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검토 추진
- 58 서울시, '심의 단축·기준 완화' 공공주택 8만 호 공급 박차



# Highlights

## 건축문화 부문

7월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6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 했다.

국토교통부와 5개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신진건축사 아이디어공모전 상반기 당선작 확정', '제23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모', '제6회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 및 전시회', '2014년 공장조경 우수기업 공모', '2014 인천시 건축상 공모' 등 건축문화와 관련 공모전 개최 및 결과 소식을 알렸다.

또한, '서울시,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시가 만드는 도시재생 작은 전시', '성공적 도시 재생 사업 방안 논의' 등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전시 및 행사 소식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알렸다.

##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총 5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청 건물에 에너지 아끼는 그린 리모델링 기술 적용', '서울시, 마을 녹화활동 펼칠 조경리더 140명 양성',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소비 전년보다 줄었다', '서울시, 서울대와 함께 조성한 옥상녹화로 국제환경상 수상' 등 경기도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및 서울시의 녹색건축 활동에 대한 사업 및 시책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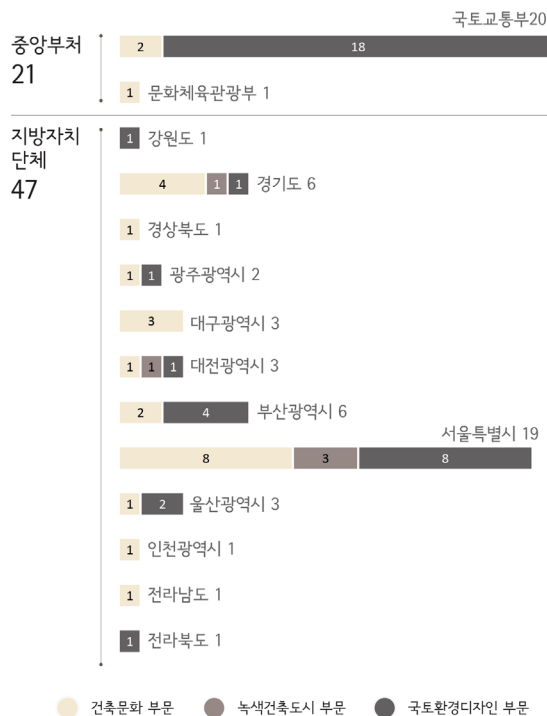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총 37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사업 본궤도 진입',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사업모델 시동', '젊은 계층이 사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까지',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사업모델 시동' 등 행복주택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주로 발표했으며,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 된다', '건설현장, 시공부터 준공까지 안전 집중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공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다', '서울시, 금천구 소공장 밀집지대에 범죄예방디자인' 등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건축물 안전 관련 사업 및 시책들을 발표 했다.

#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4년 7월,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은 총 68건이며, 이 중 중앙부처의 발표 자료는 21건(30.9%),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표 자료는 47건(69.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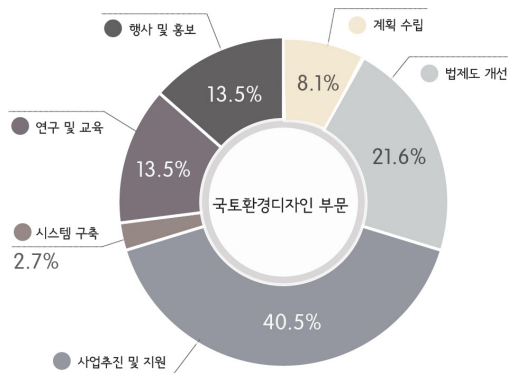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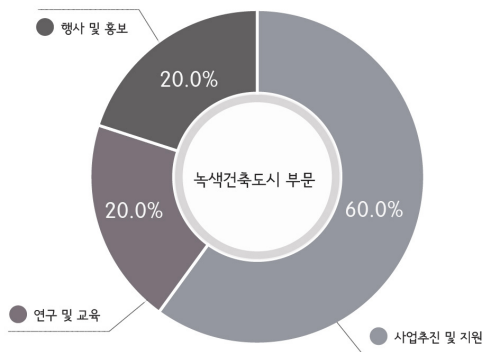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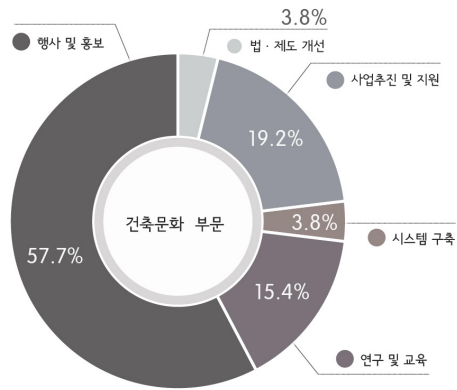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 21건(30.9%)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해당하는 발표 자료가 18건(26.5%)으로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이 중점적이었다.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 2건(2.9%), 문화체육관광부 1건(1.5%)으로 총 3건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달 「녹색건축도시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의 발표 자료는 없었다.

총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 47건(69.1%) 중 「건축문화 부문」에 해당하는 발표 자료가 23건(33.8%),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19건(27.9%)이며, 서울시의 정책사업이 「건축문화 부문」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8건(11.8%)으로 중점 발표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에서 각각 1건(1.5%), 서울특별시에서 3건(4.4%)으로 총 5건(7.4%)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2(2.9%)	—	18(26.1%)	20(29.4%)
문화체육관광부	1(1.5%)	—	—	1(1.5%)
합계 (중앙부처)	3(4.4%)	—	18(26.5%)	21(30.9%)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	—	1(1.5%)	1(1.5%)
경기도	4(5.9%)	1(1.5%)	1(1.5%)	6(8.8%)
경상북도	1(1.5%)	—	—	1(1.5%)
광주광역시	1(1.5%)	—	1(1.5%)	2(2.9%)
대구광역시	3(4.4%)	—	—	3(4.4%)
대전광역시	1(1.5%)	1(1.5%)	1(1.5%)	3(4.4%)
부산광역시	2(2.9%)	—	4(5.9%)	6(8.8%)
서울특별시	8(11.8%)	3(4.4%)	8(11.8%)	19(27.9%)
울산광역시	1(1.5%)	—	2(2.9%)	3(4.4%)
인천광역시	1(1.5%)	—	—	1(1.5%)
전라남도	1(1.5%)	—	—	1(1.5%)
전라북도	—	—	1(1.5%)	1(1.5%)
합계 (지방자치단체)	23(33.8%)	5(7.4%)	19(27.9%)	47(69.1%)
총 계	26(38.2%)	5(7.4%)	37(54.4%)	68(10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7월 발표 자료 중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부문은 전체 68건 중 37건(54.4%)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이며, 세부분야별로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15건(22.1%), '행사 및 홍보' 분야와 '연구 및 교육'분야에서 각각 5건(7.4%),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8건(11.8%), '계획 수립' 분야에서 3건(4.4%),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1건(1.5%)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총 26건(38.2%)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16건(23.5%),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5건(7.4%),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4건(5.9%), '법·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각각 1건(1.5%)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총 5건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으며,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3건(4.4%), '연구 및 교육'분야와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각각 1건(1.5%)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번 달에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의 사업 및 시책이 23건(3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행사 및 홍보' 분야 22건(30.9%), '연구 및 교육'분야 10건(14.7%), '법·제도 개선' 분야 9건(13.2%), '계획 수립' 분야 3건(4.4%), '시스템 구축' 분야 2건(2.9%)의 순으로 정리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3(4.4%)	3(4.4%)
법·제도 개선	1(1.5%)	-	8(11.8%)	9(13.2%)
사업추진 및 지원	5(7.4%)	3(4.4%)	15(22.1%)	23(33.8%)
시스템 구축	1(1.5%)	-	1(1.5%)	2(2.9%)
연구 및 교육	4(5.9%)	1(1.5%)	5(7.4%)	10(14.7%)
행사 및 홍보	16(23.5%)	1(1.5%)	5(7.4%)	22(30.9%)
총 합계	26(38.2%)	5(7.4%)	37(54.4%)	68(1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 경기도,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모색

7월 7~8일 도 인재원서 건축 관계자 워크숍 개최

도는 관내 등록 건축사와 시군 담당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부터 8일까지 도 인재개발원에서 '건축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건축 관련 민관 주체가 건축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고 건축·주택 실무 및 집행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뉘 보다 나은 건축 행정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를 간 경기도 건축·주택 정책, 건축협정제, 녹색 건축 현황과 과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작성 실무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축 관련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일에는 '하늘의 문 성당(2013년 경기건축문화제, 사 용승인 부분 대상)'과 '수지 문화 복지타운(201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우수상)'을 방문해 현장 강의를 진행해 건축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축 관계자 워크숍은 건축 행정의 민관 협력 강화라는 목적에 걸맞게 규제 개혁 강의, 토론, 의견수렴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4.07.02.

경기도 건축과

## 제23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모

공모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대구시는 건축의 공공 기여도가 탁월하고, 예술적 가치와 기술적 수준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23회 대구광역시 건축상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 내 건축물 중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2년간)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구청장·군수 및 대구지역 건축 관련 단체장<sup>1</sup> 추천을 받은 작품이다.

공모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대구시 건축주택과로 추천서, 조감도 또는 현장사진, 작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9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大賞) 1점, 일반·공공 분야 각각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1점을 선정해 건축주, 설계자, 시 공자에게 상패 등을 수여한다. 작품은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되는 '2014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행사 시 전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대구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본 건축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대구시 건축주택과(803-4623)로 문의하면 된다.

2014.07.03.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 시민 문화향유 거점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 본격 추진

올해 유휴시설과 기존시설 리모델링해 3개소 조성

(생활 속 문화 향유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부산시는 낙후되고 기능이 쇠퇴한 기존시설 및 유휴시설을 탈바꿈해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문화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sup>1</sup> 대한 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사)한국건축가협회 대구건축가회, (사)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사)대구건축문화연합

국정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공사비 61억 원 중 국고보조금 18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201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지역문화 발전 도모 및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 영위할 수 있는 ‘풀뿌리 문화공간’으로 운영)**

입지와 규모, 기능에 따라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되는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유희공간과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해 의무시설(동아리방, 다목적홀 등)과 특성화시설(댄스연습실, 공작소, 영상미디어실, 작은 영화관, 생활체육공간, 문화카페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생활 의제를 담은 프로그램과 주민운영위원회,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 조성 되는 생활문화센터 3개소는 △수영구 문화센터 △양정 1동 주민센터 △다대 목욕탕으로, 해당 시설이 갖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살리며 친근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3개 시설 외에도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2014.07.08.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생활 주변의 ‘숨은 디자인’ 보물을 찾아라!

2014년 컬러풀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개최

대구는 ‘2014년 컬러풀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6회째가 되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 도시디자인 공모전’과 ‘학생부 디자인 경시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일반부 공모전 : 시민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디자인 대상물로!)**

대구는 그동안 외적인 미관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 일상 생활공간을 디자인 대상으로 하여 시민들의 요구와 감성을 담아내어 공간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모전 주제도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생활 주변 숨은 디자인 보물찾기’로 정했으며, 디자인 대상물도 동네 공원, 통학로, 산책로, 골목길, 기타 공공 공간 등의 시민 생활공간으로 하고 있다.

출품작은 9월 15일(월)에서 9월 19일(금)까지 접수 받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 33점에 대해서는 시장상과 총 1천 96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하게 되며, 우수 작품 속의 담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심화하여 사업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모전의 매력은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과 진로 스펙이겠지만, 자신이 디자인한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멋진 경험은 없을 것이므로, 디자인 전문가나 전공 학생이라면 이번 공모전에 도전해 볼 것을 권유한다.

**(학생부 경시대회 : 디자인 하는 즐거움과 상도 받는 멋진 경험!)**

‘디자인 경시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별로 사전 참가 신청한 학생들이 10월 9일(한글날) 한 장소(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모여 서로의 디자인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서, 대회를 통해 디자인하는 즐거움과 상도 받는 멋진 경험을 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눈을 떠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시대회에 참가하려면 9월 1일(월)에서 9월 5일(금)까지 대구시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경시대회 디자인 주제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학생 스스로 작품을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 54점에 대해서는 시장상(36점) 또는 교육감상(18점)이 수여되며, 출품작들은 경시대회 다음 날부터 12일까지 현장에 전시하여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2014.07.09.

.....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 서울시,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뉴타운을 넘어 도시재생으로-서울에서 새로운 길을 열다’ 주제로 열려

서울시는 7월 15일(화) 13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1층)에

서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외 선진도시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뉴타운을 넘어 도시재생으로-서울에서 새로운 길을 열다’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초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기초강연에서는 전 일본건축학회 회장 사토 시게루 와세다 대학교 교수가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경향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세계적인 도시재생의 경향과 동향을 통해서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의 정책과 미래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발표에서는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한국의 도시정책 동향 및 거버넌스의 추진방향), 미국 시라큐스대학 프란시스코 샤닌 교수(Francisco E. Sanin,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과 원칙),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서울의 도시재생 비전과 정책방향)이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승효상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김미현 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재생센터장,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종원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서울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향후 도시재생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미래 도시재생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7.09.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 서울시가 만드는 도시재생 작은 전시

‘서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도시서민의 마을 이야기’展 개최

서울시는 7월 14일(월)부터 7월 23일(수)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서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도시서민의 마을 이야기’ 전시를 개최한다.

시는 뉴타운, 재개발 등에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고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재생을 위해 마을, 사람, 그리고 서울시의 역할이 무엇 인지를 고민해보고 그동안 개발 앞에 소외되었던 도시서민의 삶을 기록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지난 반세기 서울의 산업화 과정과 압축 성장 틈에 등장한 판자촌, 달동네는 변화하던 서울의 단편이었고, 우리네 도시서민 주거지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주택개발사업부터 현재의 뉴타운까지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거환경개선, 주택의 양적 확대라는 얼마간의 성과와 함께 지난 30여 년간 도시서민들의 삶을 지탱해준 이들 주거공간이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시는 이제는 아파트가 대신한 그 자리에 ‘마을’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함께 정을 나누었던 ‘이웃사촌’ 역시 사라져가지만, 일부 개발에서 소외된 채 고층 아파트 사이에 남아 여전히 이웃과 어우러져 살고 있는 마을과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 묻어있는 공동체성을 전시 속에서 풀어냈다.

전시내용은 세종대학교에서 연구해온 도시서민의 주거지 변천사를 토대로 도시서민의 주거지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지고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과 아직 남아있는 ‘마을’을 소개한다.

6.25 전쟁 피난민들이 북악산 성곽 아래 자리를 잡은 성북구 북정마을, 60~70년대 청계천 철거민들의 이주로 형성된 성북구 정릉골, 1960년대 이촌동 수재민, 흑석동 중앙대부지 철거민, 여의

도 개발로 인한 철거민들이 이주되면서 형성된 관악구 은천마을 등, 과거 300여개 마을에서 철거와 이주, 또 다른 생성과 소멸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31개의 마을 중 10개의 마을이 소개된다.

또한 실제 거주민의 주거를 전시공간 한 칸에 재현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전 도시서민의 대표 단아라 할 수 있는 연탄아궁이를 재현하여 직접 연탄을 갈아보는 체험공간도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아직 남아있는 도시서민의 주거지를 보여주는 한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묻어나는 ‘공동체성’을 담았다.

작지만 성찰적 자세를 통해 섬세하게 서울을 고치고,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준비한 작은 전시회로, 서울시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개발과 철거민의 아픔공유, 서울시 도시재생에 정책의 역사 재조명 등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의 역사를 서울시민이 함께 돌아보며,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재생은 어떠한가 하는 지를 고민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07.10.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 ‘우리가게 이야기 들어볼래?’... 경기 베스트 간판 대상

대상에 장동백씨 작품 ‘우리가게 이야기 들어볼래?’ 선정

도는 10일 ‘2014 경기 베스트간판 공모전’ 수상작 25점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은 장동백씨가 출품한 ‘우리 가게 이야기 들어볼래?’가 차지했다.

대상 수상작은 복잡한 골목상가의 간판을 과감하게 뜯어내고 혼

히 사용하는 천막 모양을 본 떠 간판을 만든 후, 각 가게만의 특징과 주제를 일러스트로 표현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밖에도 △금상 정희정(조가 복을 담다), 김원영(콩요리 전문점 콩두부), △은상 김하늘(오르락내리락), 이수빈(머슴밥), 박형순(매향철물), 이종건(숨) 등 25점의 아름다운 간판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 1점에는 시상금 500만 원, 금상 2점 각 250만 원, 은상 4점 각 150만 원, 동상 8점 각 4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장려상 10점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장 명의의 상장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홈페이지 등에 수상작품을 공개하고, 시군 협조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2014.07.10.

..... 경기도 디자인담당관실

## 2014 인천시 건축상 공모

8.16.~9.17일까지 접수, 수상작은 시상 및 작품 전시

인천시는 도시환경 개선 및 선진수준의 건축문화를 발굴·보급하기 위해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2014 인천시 건축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인천지역 내 소재 주거·공공·일반건축물이며, 리모델링(대수선 이상) 건축물<sup>2</sup>도 가능하다.

신청인은 공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건축주와 시 및 군·구에서 발굴·심사해 선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건축주, 시공자가 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시 및 군·구 건축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설명 및 전시용 패널, 작품배경·계획개념·특기사항 등을 담은 설명 자료와 함께 신청기간 내에 인천시 건축계획과(민원동 3층)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의거 1차 예비심사(패널) 후 2차 본심사(현장조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3점(분야별 1점씩), 장려상 5점(분야 불문) 등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014 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상장과 기념동판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 및 군·구 건축위원으로 우선 추천하는 혜택이 부여되고, 응모 작품에 대해서는 수상과 상관없이 '2014 인천건축문화제'행사기간 중 전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건축상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건축계획과(440.4723)로 문의하면 된다.

2014.07.10.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 광교 호수공원, 올해 '최고의 경관'

기존 저수지를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재생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광교 호수공원'이 7월 11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광교 호수공원'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난립하던 기존의 저수지를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변모시켰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기존 저수지에 대한 추억을 담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적은 비용으로도 마을을 가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sup>2</sup> 임시사용 건축물 또는 기 출품했던 수상작은 대상에서 제외



준 송파구의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과 인적이 끊겼던 간이역을 인기 관광지로 탈바꿈 시킨 한국철도공사의 「이야기가 있는 간이역」 등 4개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주제로 한 특별상은 근대 역사거리라는 지역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간판을 정비한 대구 중구의 ‘진골목’이 수상했다.

■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선정결과

유형	방식	주요 내용
최우수상	자연경관	광고, 호수를 마음에 담다 (경기도시공사)
	시가지경관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경관 개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역사문화경관	현풍 느티나무 테마 휴게소 사업 (한국도로공사)
	역사문화경관	디자인 코레일, 이야기가 있는 간이역 (한국도로공사)
특별상	공공디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 (광주광역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대구 진골목 (대구광역시 중구)

수상작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51건 사업을 대상으로, 경관 분야 3대 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공공디자인학회)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선정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조선대 교수는 “최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우수한 사업들이 많았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의 경관자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집 발간, 동판수여, 경관포털 구축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독려할 계획이다.

■ 광고 호수공원, 송파 골목길, 느티나무 휴게소, 화본 간이역, 폴리 프로젝트, 진골목



2014.07.11.

.....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과

## ‘신진건축사 아이디어공모전’ 상반기 당선작 확정 구서초 응벽개선(부산) 및 동명초효평분교 리모델링(대전) 아이디어 공모에 남옥재, 전병헌 건축사 작품 각각 선정

국토교통부는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정책 중 하나인 ‘신진건축사 아이디어공모전(상반기)’의 최종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본 아이디어 공모는 개념도 및 이미지 등을 담은 A3용지 5쪽 이내의 제출물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 아이디어 및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진건축사에게 다양한 공공사업 참여의 물꼬를 터줌과 동시에,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신진건축사의 참

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참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7월초에 심사(1차 서류, 2차 프레젠테이션)를 진행하여 각 사업에 대한 당선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당선자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권을 부여하는 부산시 「금정구청의 옹벽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공모에는 남옥재 건축사(이숨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었고, 입선작에는 김진숙(공명건축사사무소), 조병규(투닷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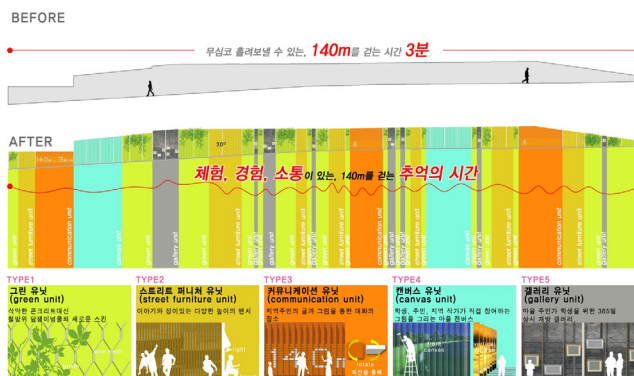
남옥재 건축사가 제안한 안의 경우, 옹벽환경개선의 현실성을 염두하여 5가지로 구분한 디자인이 우수하였고, 시공성 및 유지관리적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동명초 효평분교 리모델링 및 관광자원화」 공모에서는 전병현 건축사(더사이트건축사사무소)와 김상철 건축사(세가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각각 당선작과 입선작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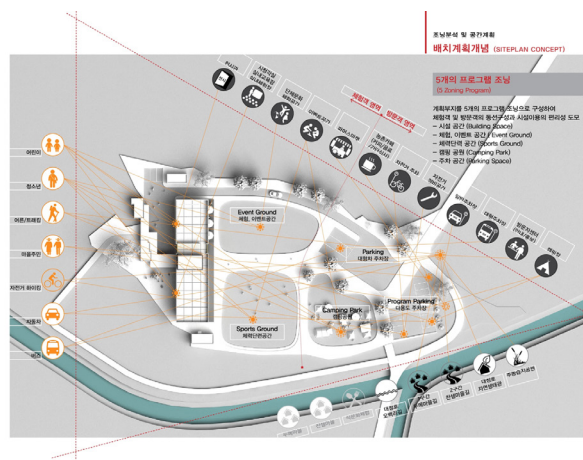
전병현 건축사는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상황을 조사·분석한 마스터플랜과 함께, 신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접목한 저예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신진건축사 대상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통해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WALLSCAPE  
아이디어 제안



■ 구서초등학교 옹벽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 이숨건축사사무소 남옥재



■ 효평분교 리모델링 및 관광자원화 사업 : 더사이트건축사사무소 전병현

2014.07.13.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서울시 '50년 도시정책 수출' 온라인 사이트 16일 오픈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본격화하기 위한 종합 사이트 '서울정책아카이브'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종합 사이트인 '서울정책아카이브(www.seoulsolution.kr)'가 16일(수) 오픈했다.

이곳에선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축적해온 서울의 다양한 도시운영 노하우와 우수정책 100여건의 도입배경부터 추진과정과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등을 볼 수 있고 원할 경우 정책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으며, 시 정책과 연관된 국내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해외 동반 진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민관협력 창구도 개설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정책아카이브를 개설, 서울정책 공유를 희망하는 해외도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도시운영경험과 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콘텐츠는 크게 △서울우수정책 △정책공유사업 △해외도시정보 △민관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우수정책) 1960년부터의 서울 발전사와 현재 서울의 인구, 출생률 등 주요 분야별 지표 제공, '서울정책실' 코너에서는 교통, 상수도, 도시철도, 전자정부 4대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 매뉴얼과 8개 분야 총 100여 건에 달하는 정책소개서 제공

정책소개서에는 도시계획, 주택, 친환경,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하수도 8개 분야 정책별로 정책의 도입배경, 추진과정 및 노하우,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등을 상세히 정리해 해외도시의 정책시행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적으로 시대별 정책흐름을 알 수 있는 시대별 정책변천사를 소개해 각각 다른 정책여건 하에 다양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개도국 도시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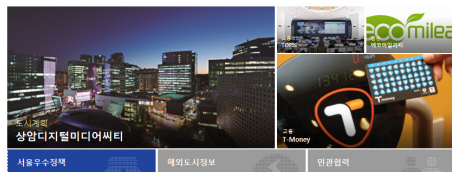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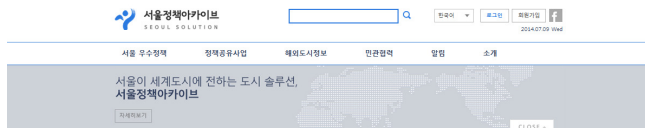
(정책공유사업) 현재 우수정책 해외진출현황, 컨설팅, 프로젝트 등을 제공

(해외도시정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한 해외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도시 인프라 관련 해외사업 발주 정보, 시와 해외교류도시를 통한 해외도시 현안 등), 해외수주와 관련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기업의 해외진출 대상도시 발주처 공무원들을 초청해 서울시 우수정책 관련 연수 및 정책현장견학 지원

(민관협력) '사업제안' 코너를 활용해 민관이 협력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 시는 해당 제안에 대해 사업 실행 및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시는 향후 정책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은 물론, 전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정책 해외진출 지원을 총괄하는 최대의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국제교류사업단장은 "아카이브 홈페이지 오픈으로 서울정책 공유를 희망하는 해외도시,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손쉽게 정책 자료를 접하고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해외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등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나아가 세계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정책아카이브 홈페이지

2014.07.16.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담당관

## 경기도 건축명소 담은 책 나와

도 내 건축명소 모은 '지도로 보는 아름다운 경기건축' 발간

경기도는 도 내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명소를 소개하는 '지도로 보는 아름다운 경기건축'을 발간했다.

홍보책자는 건축명소별 위치, 사진, 설명글, 건축공간 특징을 담은 화보, 지역 건축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 쉽게 건축명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건축 가이드북, 경기도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건축안내지도(리플렛) 등 3가지 유형이다.

책자에는 역사적·지역적 특성,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 건축문화상 등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은 건축물들이 수록됐으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명소를 직접 찾아 사진을 촬영하고 건축, 도시, 언론미디어, 홍보 전문가 등의 심의·자문을 거쳤다.

화보는 시·군 도서관, 가이드북은 민원실 등에, 건축안내지도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명소 홍보물 게시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소식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주명걸 도 건축과장은 "홍보책자 발간이 일상생활을 이루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과 공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건축문화유산 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경기건축' 화보책자

2014.07.17.

경기도 건축과

## 대구환경공단,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 참여

자재 기술력과 인력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

대구환경공단은 7월 17일 주거에 취약한 소외계층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1000호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보금자리를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





한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등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추천을 받아 현장방문 후 결정한다.

대구환경공단은 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경영실천’을 위해 지난 2013년도에 5가정의 집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17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나누미봉사단 100여 명이 총 8가정에 대하여 도배, 장판, 방문, 싱크대 등의 수리를 나누미봉사단의 경비(약 1600만 원)로 할 계획이다.

대구환경공단은 2004년 나누미봉사단을 결성하여 매년 노·사 간 협력 사업으로 소외계층 위문방문 및 노력봉사,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후원협약, 1사 1촌 및 전통시장 자매결연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2014.07.18.

..... 대구광역시 대구환경공단 총무재정팀

## 남경필 지사, 파북마을 만들기 주제로 대화마당 열어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가, 마을 리더 등 현장의 목소리 듣기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민선6기 핵심공약인 파북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화마당이 열린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파북마을, 이렇게 추진하자!’란 주제로 도의원, 현장 활동가, 연구기관 전문가,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센터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굿모닝 경기도, 파북마을 만들기’ 대화마당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대화마당은 파북마을 추진과 관련 첫 회의로 구체적인 의견보다는 국내외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파북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며 파북마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어 패널에 붙이는 행사도 함께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파북마을의 성공조건이 주민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참여와 소통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민이 지역 맞춤형 운영방안을 결정하면, 도와 시·군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밑그림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운영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경청한 후 마을공동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 파북마을 만들기 정책을 입안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파북마을 만들기 사업이 공동체 복원과 함께 보육, 저출산, 노인, 일자리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북마을 만들기는 지난 2월 발생한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이웃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해체된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서 따뜻한 사회 만들자는 사업이다.

2014.07.20.

..... 경기도 기획담당관

##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 전에 ‘사전 디자인 자문’ 받으세요

서울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최초 참여 준비업체 대상  
디자인자문 시행

서울시는 서울형 공공시설물 제조업체를 발굴, 육성하고자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처음 준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서울클릭<sup>3</sup> 사전 디자인자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up>3</sup> 2009년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탈락제품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작, 디자인 분야에 관심과 투자여력이 없던 공공시설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 및 디자인개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올해 새로이 도입된 '사전 디자인자문' 제도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도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서 디자인 개발은 했으나 제품제작 전 서울시 디자인방향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 할 수 있어 제품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최초 참여 준비업체 중 디자인 개발 경험이 없거나 디자이너 1인 이하의 업체로 디자인 자문이나 개발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인증제 출품대상 품목이며,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제품 중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제품으로 신청기간은 7월 21일(월)부터 8월 18일(월)까지이다.

박내규 서울시 공공디자인과장은 “공공시설물 제조업체의 활성화와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디자인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 알림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4.07.20.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과

## 광주시청사 시민공간으로 재단장 한다

### 기획 단계부터 시민 참여해 직접 활용방안 결정

광주시청사가 시민들에 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생활공간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행정목적 위주로 활용돼온 시 청사를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간구성과 방법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아이디어 구성단계에서 각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청사 활용방안을 제시토록 시민사회, 학계, 공공디자인전문가 등으로 '리노베이션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론화와 결정 단계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시민단체 대상 설명회, 광주디자인센터의 공간배치·디자인 자문, 시청사 리노베이션 TF팀 안전토론과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이 직접 모델 창출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홀, 광장 등 리노베이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고 청사 방문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걸치며, 더불어 서울시를 비롯한 선진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아이디어를 빌려 활용할 방침이다.

실행 단계에서는 간단한 시설물은 즉시 설치 또는 개선하고, 시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시설은 올 말까지, 신중한 결정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청사 리노베이션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공간 또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시민청사로 변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 타 시·도 선진사례, 윤장현 시장의 직원과의 대화 등에서는 지상 1층 시민홀에 더불어 나눔방, 낙서장, 시민발언대, 작은 도서관, 로컬푸드 판매점, 야외광장에는 어린이 정원, 책 읽는 벤치, 포토존, 웨딩포터, 캠핑장 설치 등이 제안됐다.

2014.07.21.

..... 광주광역시 회계과

## 서울시,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도시 서울을 위한 디자인 47점 선정

실물로 제작해 전시회 개최 후 특성에 맞는 장소에 설치해 이용

서울시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디자인 시민공모전’의 2014년도 수상작 47점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도시 서울’을 주제로 서울의 광장, 공원 등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벤치·그늘막 등 ‘휴게시설물 부문’과 공공청사, 지하철 역사, 가로변 등에 설치되어 시민의 생활과 공유·공감할 수 있는 휴지통,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위생시설물 부문’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 200여점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하였다.

작품 심사를 위하여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등 관련 분야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휴게시설물 부문에서는 황윤철·이소영의 ‘낭창낭창’ 벤치가, 위생시설물 부문에서는 홍성민·오상길의 ‘말하는 휴지통’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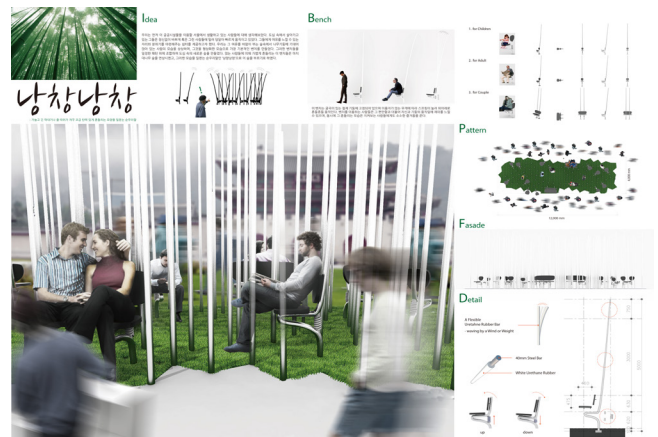
휴게시설물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낭창낭창’ 벤치는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바람 부는 숲속에서 대나무 기둥에 기대어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며 형상화한 벤치로서,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한 벤치이며, 위생시설물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말하는 휴지통’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형태는 말풍선을 모티브로 하여 말하는 휴지통이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디자인되었다.

이 밖에 휴게시설물 부문에서는 금상 강동한·최가영 외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10점, 입선 15점 등이 선정되었으며, 위생시설물 부문에서는 금상 오재환·최민경 외 은상 2점, 동상 2점, 장려상 4점, 입선 5점 등 총 47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9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

작품은 실물로 제작하여 전시회를 개최한 후 작품 특성에 맞게 장소를 선정·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모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디자인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휴게시설물 대상(낭창낭창)



■ 위생시설물 대상(말하는 휴지통)

2014.07.23.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과

## 제6회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 및 전시회 가져

24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 시청 2층 전시회 병행

대전시는 24일 오후 4시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시 관계자와 수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품은 시청사 2층 로비에서 30일까지 7일간 전시한다.

시에 따르면 '대학로 문화의 거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전국 52개 대학 학생 및 일반인 등 391명이 참여하였고 203개 출품작 중 13개의 입상작(대상, 금상 등)과 42개의 입선작(특선, 입선)이 최종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에는 시설물디자인 부문에 출품한 박태희 씨의 'Spread your Wings (날개를 활짝 펴다)'가 선정됐으며, 금상에는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재영·최민아씨의 '대학로 르네상스'가, 은상에는 N-studio 나석영씨의 '광장, 꿈을 위한 우리 모두의 무대'와 한밭대 김효경·조성환 씨의 '웃골 square' 등이 최종 수상자로 확정되었다.

시는 향후 시행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모전을 통해 제시된 좋은 아이디어와 우수작품을 접목시켜 나갈 방침이며, 이번 우수작품 시상식에서는 대상 300만 원, 금상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상패가 수여된다.

2014.07.24.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성공적 도시 재생사업 방안 논의

전남도, 25일 시군과 2015년 도시 재생사업 선정 위한 전략회의

전라남도는 25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도시계획·재생 담당 과장 및 담당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및 도시계획

맞춤 전략회의를 갖고 성공적인 도시 재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전남도는 지난 5월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목포, 순천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해 단계별 실천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또한, 국토부 담당사무관을 초청해 2015년 정부의 도시 재생 추진 계획과 순천시 도시 재생 사례를 듣고 전남도의 전략을 토의했다.

국토부에서는 내년에 3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전남도는 2~4개소 선정을 목표로 2015년 1월까지 도시 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으로 토지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의 행위제한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회권고제도나 도시 재정비를 통해 사전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전략회의는 도시계획 및 도시 재생사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및 도시 재생 사전 자문, 관계 공무원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 시군 도시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4.07.25.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 서울시, '한양도성 학술총서'로 한양도성의 가치 재정립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수록한 '한양도성 학술총서' 3권 발간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앞두고 한양도성의 가치를 정립하여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한양도성 학술



총서'(한영대역판) 3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양도성 학술총서'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 학술회의의 결과를 집성하여 한양도성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발간됐다.

'한양도성 학술총서'는 2013년 2월 개최된 제1차 한양도성 국제 학술회의의 '역사도시와 도시성곽',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의 '아시아도성의 조영원리와 도시성곽',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3차 한양도성 학술회의의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와 진정성' 등 3회에 걸친 학술회의의 성과를 도서로 수록 집성한 것으로, 각 책의 제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 : 역사도시와 도시성곽)이 책에서는 세계 유수의 역사도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역사도시의 미래상과 보존·관리 방향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아시아-중앙아시아-지중해연안 도시성곽의 보존과 관리사례가 수록되어 있어 한양도성과 이들 성곽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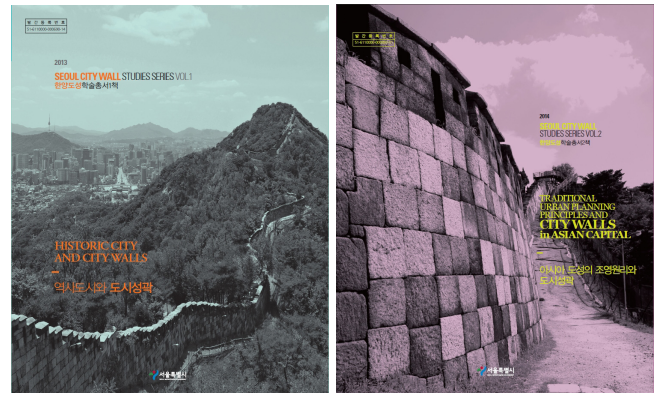
(제2책 : 아시아도성의 조영원리와 도시성곽)이 책에서는 유럽·중국·베트남의 도시성곽과 한양도성의 비교를 통해 한양도성만이 가지는 독특성 및 고유성이 부각되었으며, 한양도성을 세계유산 기준에 적합하게 보존·관리·활용 위한 방법도 제시되었다.

(제3책 :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와 진정성)이 책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기준에 맞는 보존·관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에는 한양도성의 축성기법·구조·성돌 재질 규명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의 축성술 등 기술 과학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룬 책으로서 의미가 깊다.

서울시는 2015년에는 '도시유산의 발굴과 보존(가제)', '한양도성의 보존기법(가제)' 등 한양도성 보수 정비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총서를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한양도성 학술총서'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 등 국외소재 주요 기관으로도 배포되어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홍보하는 데도 적극 활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한양도성의 진정성, 완전성, 유사유산과의 비교연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요건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계획이다.

도서의 열람은 서울 신청사에 자리한 서울도서관과 각 지역 도서관에서 가능하며, 한양도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일 내려 받기를 할 수 있다.



한양도성 학술총서 1책, 2책 표지

2014.07.28.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 지역문화계의 오랜 숙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지역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발전으로 문화자치시대 개막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과 법 시행령이 오는 7월 29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

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 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마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문화도시 육성,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다.

#### (지역의 생활문화 지원 및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 구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활동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 농산어촌 등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

△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상기 기관들을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

####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

△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지구 지정 조항을 이관 받아

지속적인 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지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

#### (지역문화 진흥 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단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지역문화재단 등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문체부는 이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문화 저변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융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7.28.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 서울시, 200여개 기업·기관과 ‘도시정책 해외진출’

### 공동 모색

서울시, 대규모 민간협력 네트워크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간협력 포럼」 출범

서울의 교통, 상·하수도과 같은 우수 도시정책을 개도국에 수출

하는 일부터 우리 민간기업의 관련 사업 해외 수주와 외화벌이를 견인하는 일까지 공동으로 모색하는 200여개 기관의 대규모 민관협력 네트워크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이 30일(수) 출범한다.

지난 50년간의 서울의 도시발전 사례가 유사한 과정에 놓인 많은 개도국 도시들의 롤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에 서울시의 국제신인도가 더해지면 보다 효율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9개 개발협력 유관기관<sup>4</sup>도 자신들이 가진 해외 네트워크와 협력 노하우로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을 출범, 서울의 행정경험과 민간의 선진기술력, 유관기관의 노하우를 융합하는 해외진출 민관협력을 통해 서울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카드 같은 서울의 우수정책을 수출하면서 민간기업과 협력해 수주한 경험은 있지만, 개발협력 유관기관까지 가세해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난 16일(수) 문을 연 ‘서울정책아카이브’가 온라인 민관협력 창구였다면, 이번엔 출범하는 포럼은 오프라인에서 민관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모아내고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포럼은 크게 △개도국 여건에 맞는 도시솔루션 개발 △협력사업 발굴·추진 △해외진출 모색 △민간 수주지원 4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포럼〉과 〈분야별 포럼〉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전체포럼〉은 분기별로 개최하며, 모든 기관이 모여 종합적인 민관협력 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분야별 포럼〉은 서울시 정책 중 해외도시로부터 특히 벤치마킹 요청이 많은 △도시계획·주택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하수도 △환경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매월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0일(수) 오전 10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협회·학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 이어서 시 상수도분야 해외진출사례 등 서울정책 해외진출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민관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갖고, 맞춤형 금융컨설팅을 제공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포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반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과정 속에서도 정책과 기술을 빠르게 혁신해 세계수준의 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에 서울의 경험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개도국 도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포럼을 통해 서울형 정책을 잘 모델화해서 세계 도시문제 공동해결의 주축이 되고, 기업의 해외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7.30.

..... 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반

## 경북도, 친환경 주거문화 대안으로 신 한옥 제시

경상북도는 21세기 친환경 주거문화의 대안으로 경북의 정체성이 담긴 신 한옥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민간중심의 한류열풍과 정부 중심의 한 브랜드정책이 이어지면서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한옥이 21세기 주거문화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sup>4</sup>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 내 질적으로 우수한 한옥이 잠정 8만9800채 정도 분포하고 있고, 한옥이 밀집된 마을(10호 이상)은 28개 마을이 있으며, 이들 마을은 전통적 건축경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건축자산을 한옥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한옥 전문가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최상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타 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경북도만의 한옥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경상북도 한옥정책 개발의 큰 흐름은 전통한옥의 보존과 오늘날 현실에 맞는 한옥 개발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통한옥의 순기능적 장점을 바탕으로 해 한옥의 현대화와 산업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옥조사에 의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에게 최적의 한옥 향유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 경상북도 한옥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2014.07.31.

..... 경상북도 대변인실

## 산복도로 여행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 한자리에

부산시, '산복도로 이야기 2' 발간

부산시는 산복도로 여행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책으로 엮어 '산복도로 이야기 2'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난 6월 산복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여행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 등 총 26편을 수록하며, 산복도로에 얹힌 추억,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등을 소개한다.

과거 고단했던 서민의 삶을 품어 준 산복도로에 얹힌 유년의 추억,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 가난했지만 이웃과 나누고 함께했던 시절 등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산복도로 체험수기와 함께 산복도로 풍경사진을 삽입해 산복도로가 지닌 가치와 낭만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자는 각 자치구, 주민협의회,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부산시 홈페이지 시정전자자료실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병수 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부산시는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재생을 위해 산복도로에 얹힌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찾고, 고유의 마을문화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의 삶에 얹힌 이야기가 모여 산복도로의 기록이 되고, 부산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앞서 2011년에 산복도로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작을 담은 '산복도로 이야기'를 발간한 바 있으며,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현재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한 산복도로 지역이 공정여행 대상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다.

2014.07.31.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 ‘2014년 공장조경 우수기업’ 공모 우수기업체 인증 동판 등 인센티브 제공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를 선발하여 표창하는 ‘2014년 공장조경 우수기업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8월 1일 ~ 9월 26일 울산시 소재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녹지공원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선정기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우수기업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울산시가 추진하는 관련분야 교육 및 정보제공 기회가 부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단지역 기업체 녹화와 조경관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크므로 많은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14.07.31.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서울시, 육백년 도성의 역사를 품은 ‘한양도성박물관’ 개관

한양도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성

서울시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동대문성곽공원 내 디자인 지원 센터에 서울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조망하는 한양도성박물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한양도성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도성 관련 국내외 자료를 구비한 도성정보센터와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공간의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살아 있는 상징이자 자랑인 한양도성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산하에 한양도성연구소를 신설하고 한양도성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한양도성 낙산구간 탐방로 시작지점인 홍인지문 옆 동대문성곽 공원에 위치한 한양도성박물관은 상설전시실 관람 동선을 낙산구간 탐방로와 바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여 한양도성을 찾는 이들에게 한양도성 탐방의 중심거점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 전시물로는 1749년 제작한 돈의문 현판(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홍인지문에 올려졌던 용두와 잡상 8점, 레고로 제작한 승례문, 한양도성을 돌며 촬영한 순성 체험 3면 영상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1915년 철거된 돈의문의 현판은 약 100년 만에 최초로 공개되는 유물로서 일제강점기 한양도성 훼손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전시물이다.

한양도성박물관은 (재)성북문화재단과 함께 어린이들의 한양도성 그림과 젊은 작가들이 협업한 ‘이야기로 이어진 선, 한양도성’ 아트워크를 전시하고 있으며, 레고 동호회 회원들은 1900년 전후 승례문과 주변 모습을 레고 모형으로 재현하는 등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개관을 기념하여 2008년부터 서울역사박물관이 주력해 온 남산 한양도성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발굴유물 특별전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을 마련하였다.

봉수대지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한 아동광장, 백범광장, 중앙광장 등 남산 회현자락 일대 도성 발굴 모습과 결과물을

유물 및 성돌과 함께 전시하며, 오는 9월 14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한양도성박물관은 연 2회 백악, 낙산, 남산, 인왕산 4구간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름 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레고로 도성과 성문 쌓기 등 역사 학습과 놀이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양도성박물관은 상설전시와 다양한 기획전시로 서울 한양도성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도성탐방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도성에 대한 정보 요람이 될 것이다.

전시 개막식은 7월 31일(목)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도성 관련 전문가 및 박물관계 인사, 예술가, 도성 관련시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 한양도성박물관 입구, 3층 상설전시장

2014.07.31.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 경기도청 건물에 에너지 아끼는 ‘그린 리모델링 기술’ 적용 경기도청 제2별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시범 사업 선정

에너지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경기도청 제2별관이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경기도는 수원 소재 경기도청사 제2별관이 국토부 공모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공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건물로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공비 지원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0년 준공된 경기도청 제2별관은 서향의 유리커튼월(단창) 구조로 에너지 소비가 많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이다. 이 건물 유리 열통과울과 일사투과율은 2014년 신축된 건물보다 2배가량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으로 도는 7월 중 단층으로 돼있는 창문을 태양열 차단 성능이 우수하고 단열 성능이 뛰어난 로이유리(Low-E)로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LED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국토부 사업과는 별도로 오래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로 바뀌주는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포천시 심곡리 경로당과 가평군 하색리 마을회관 등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각 1억 원씩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책정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낡은 경로당과 주택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올 11월까지 녹색건축 전문가와 협력해 만들 예정이다.

2014.07.02.  
경기도 건축과

##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소비 전년보다 줄었다 대학·병원·호텔·백화점·대기업 100개 건물 '13년 에너지소비 성적표 공개

서울시가 작년 처음 시내 100개 에너지다소비건물의 '12년 에너지 소비 성적표를 공개한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이들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전년보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100곳 가운데 71곳이 전년대비 총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했고, 전력 소비도 68개 건물에서 줄었으며, 이들 건물의 총 에너지소비량은 전년대비 평균 3.4% 정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호텔이 △6.53%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백화점(△4.32%), 대기업(△2.80%), 대학(△2.37%), 병원(△0.98%)이 뒤를 이었다.

개별 건물로는 롯데몰 김포공항점이 총 에너지소비량을 14.04% 줄여 절감률 1위를 차지하였고, 그랜드하얏트서울(12.58%), 성균관대학교(12.3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13년 한 해 5개 분야(병원·대학·호텔·백화점·대기업)별 총에너지사용량 상위 20개 건물, 총 100개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에너지 소비 성적표를 이와 같이 3일(목) 공개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12년~'13년 에너지 사용량 통계치를 근거로 이번에 공개한 항목은 △총 에너지소비량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총 전력소비량 △면적당 전력소비량 4가지다.



총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물은 서울대학교(총 43,137TOE)로, '12년에 이어 2년 연속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건물로 조사됐고,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물은 그랜드하얏트서울이었으며, 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17.84%가 증가한 중소기업은행(을지로)이었다.

서울시는 시내 총 469개 에너지다소비사업장 가운데 건물이 91.7%(430개소)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사용량의 66%(251만TOE)를 차지하는 만큼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해 에너지 낭비를 막고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공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100개 에너지다소비건물에서 '13년 한 해 사용한 총 전력량은 2,722GWh로, 서울시내 총 전력사용량(46,555GWh)의 5.8%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총 에너지소비량과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모두 병원(10,888TOE, 72.9kgoe/m<sup>2</sup>)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이어 총 에너지소비량(TOE)은 대학(10,163) > 호텔(7,630) > 백화점(7,417) > 대기업(4,34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면적당 에너지소비량(kgoe/m<sup>2</sup>)은 호텔(68.4) > 백화점(47.0) > 대기업(42.6) > 대학(29.6) 순이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에너지 소비 성적표를 공개한 가운데 공개 첫해보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 민간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과 절약 동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건물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은 430개소에 이를 정도로 건물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만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더 많은 건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7.03.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정부대전청사 콘크리트 광장이 생태휴식공간으로

2016년까지 국비 40억 투입, 생물서식·관찰로 등 생태휴식공간으로

대전시가 정부대전청사 전면 콘크리트 광장을 시민들의 쉴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도시민에게 생태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환경부 ‘2014 자연마당’ 조성 공모 사업 최종 선정돼 정부대전청사 전면광장 56,860m<sup>2</sup>을 오는 2016년까지 국비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숲, 습지, 개울 초지 등 다양한 생물서식처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시민단체, 각계각층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포장 철거 등 기반정비 공사를 마치고 2015년에는 기반 조성 및 수목 식재 사업 등을 하, 2016년에는 습지 등 생물서식 공간, 자연학습장, 관찰로 등 복원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전면광장은 1992년 정부대전청사 건립 당시 시민들의 만남, 휴식 등 활동공간으로 조성됐으나 넓은 면적의 콘크리트, 타일, 블록 등으로 포장되어 여름철 복사열로 인한 도심 열섬화 현상 및 호우 시 도시 침수피해 원인이 되며, 특히 여름철 포장면의 눈부심과 그늘, 쉼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많은 주민과 주변 건물 종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샘머리 공원의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에 생태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택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정부대전청사 전면광장을 철거



후 생태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면서 “공사 기간 중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도시의 생태거점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 대전 정부청사 및 전면 광장

2014.07.08.

.....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 서울시, 서울대와 함께 조성한 옥상녹화로 국제환경상 수상

### 9일(수) 국제환경대회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Energy Globe Award)’ 수상

서울시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 사업이 빗물저장 및 에너지 절감 효과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환경분야상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

상(National Energy Globe Awards)’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옥상녹화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35동 826㎡ 규모를 녹화와 텃밭으로 조성했는데 이 사업이 빗물 저장과 홍수예방, 건물의 평균온도를 낮춰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수상식은 7월 9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에너지 글로브 재단을 대신하여 오스트리아 대사가 직접 상장을 전달한다.

서울시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이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을 수상하게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세계상(Energy Globe World Award)’의 후보가 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꽃과 나무를 심고 새와 벌들이 날아오게 만드는 옥상녹화가 도시의 여러 환경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친환경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을 계기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대 35동 옥상녹화(야생화 식재구역)



■ 서울대 35동 옥상녹화(옥상텃밭 조성구역)

2014.07.09.

..... 서울특별시 조경과

## 서울시, 마을 녹화활동 펼칠 '조경리더' 140명 양성

5월부터 12주간 '2014 제1차 시민조경아카데미' 운영해

조경·정원문화 등 교육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12주간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4년 제1차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운영한 결과 1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시민주도의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와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공동으로 푸른 도시를 실천하고, 녹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어 시민들에게 식물·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이 각자 살고 있는 동네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이웃 주민들에게도 녹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눌 '조경리더'를 양성하는 녹색교육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에는 학생, 직장인, 전업주부, 어르신 등 20대에서 70대

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수강생 총 195명 중 140명이 수료, 72%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이번까지 총 3차례 운영하면서 총 63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44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교육 이후에도 공원이나 가로수를 관리하는 봉사활동과 함께 다양한 서울시 행사나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세 달 간 매주 1회 총 12회 강의로 구성됐으며, 조경학과 교수, 조경설계가, 조경시공인, 조경기술사, 공공조경가 등 조경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의했다.

강의내용은 조경을 넘어 정원문화, 가드닝, 녹색환경 등 시민의 녹화의식 향상을 위주로 한 교육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됐다.

수료생 김철희 씨는 "이번 과정을 수강하면서 조경과 정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열정을 가진 다양한 수강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고, 지금 당장 내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조경활동부터 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조경아카데미'의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거쳐 9월에 더욱 발전된 2014년도 제2차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진행, 도시녹화가 생활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손쉽게 조경과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교육이 조경과 정원, 공원을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녹화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녹색문화가 일상 속에 확산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녹색 어머니가 충만한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7.29.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15건의 국민 불편 유권해석 심의, 11건 해소

금년 11월 29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하여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장일치로만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당초 개선 권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간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하여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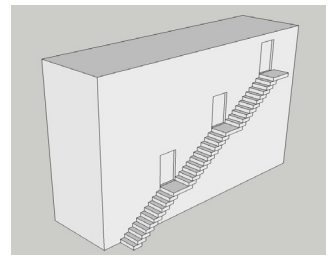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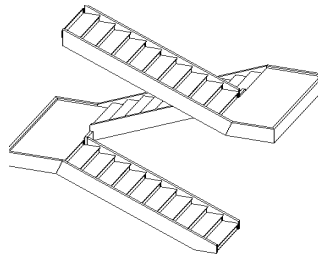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15건의 민원사례 주요 내용)

- ①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을 부속용도로 구분
- ② 건축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
- ③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구분
- ④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

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한다면 필로티로 인정

- ⑤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하여 교차형태 직통계단(A) 뿐만 아니라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B)도 직통계단으로 인정



■ 좌(교차형태 직통계단 A), 우(일직선 방향 직통계단 B)

## (법령 규정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4건에 대해 기존 해석 유지)

- ①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 건축물 높이 31m 초과여부 판단 시 최상층 바닥이 31m 아래에 있어도 전체 높이가 31m를 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
- ② 기타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 건축물 양성화는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 관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구역 지정 전 건축물은 양성화 가능하나, 구역 지정 후 별도의 대수선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건축법」 개정·공포로 금년 11월 29일부터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고 하였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7.0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서울시, 금천구 소공장 밀집지대에 '범죄예방디자인'

소공장 밀집한 가산동, 독산동 등 일대 대상

서울시가 재건축지역인 마포구 염리동과 학교(강서구 공진중)의 실질적 효과를 바탕으로 여성원룸밀집지(관악구 행운동), 재래시장(중랑구 면목동), 외국인 거주지(용산구 용산2가동), 공원(양재시민의숲 등) 등 서울시내 곳곳에 적용해온 범죄예방디자인을 이번엔 소공장 밀집지대(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일대)까지 확산한다.

이 일대는 나사 등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및 장비를 만드는 가내수공업 공장이 30%에 이르고 주거(70%)가 혼재돼 있는데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무산으로 건축물 노후 불량도가 64%에 이르는 지역이며, 좁은 골목, 어두운 조명 등 각종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 외국인 비율 전국 2위(안행부, 2013)로 인근 서울디지털 23단지 및 대상지내 소공장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장지와 주거가 혼재해 있는 소공장 지대 환경의 취약요인 및 주민의 행태를 분석해 범죄예방디자인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상지 선정은 범죄심리학자, CPTED분야 전문가, 경찰청 관계자, 행동심리학자, 커뮤니티디자이너 등 총 14인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경찰청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방문을 거쳐 최종 이뤄졌다.

서울시는 공장지대에 적용하는 범죄예방디자인은 이번이 첫 시범사례인 만큼, 이에 걸 맞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디자인 모델을 개발해 올 연말까지 적용·완료하고 사례를 보급해 추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대상지 3곳 △관악구 행운동(싱글여성 밀집지역) △중랑구 면목동(재래시장, 사회적 약자 밀집지역)

△용산구 용산2가동(외국인 밀집지역)에도 염리동 사례처럼 올해 각각의 마을 성격에 적합한 커뮤니티 강화 및 맞춤형 디자인을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강태웅 서울시 관광정책관은 “재건축 지역, 싱글여성 밀집지역, 소공장 밀집지역 등 범죄에 취약한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범죄가 일어나기 힘든 환경, 이웃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환경을 뿌리내림으로써 각종 범죄 발생률을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천구 현장사진(좁은 골목과 사각지대, 조도가 낮은 필로티 주차장)

2014.07.02.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 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국비 640억 투자

대전역세권 등 8개 촉진사업 지구에 집중 투자로 민간 정비사업 참여 유도

대전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도로, 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사업비로 국비 370억 원을 확보하고 그 중 1차로 27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지원하는 예산액 총 1,250억 원 중 1차로 지원되는 800억 원 중 33.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다.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자치단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시에서 부진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한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와 준비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얻은 성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엔 지원된 국비 270억 원과 지방비 270억 원을 포함한 540억 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이 확정된 8개 지구(대전역세권,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도룡, 상서·평촌, 신탄진)의 사회적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로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도 하반기 중 2차로 지원되는 전국지원예산(1,250억 원)의 잔액 450억 원 중 100억 원의 국비에 지방비를 포함한 약 200억 원을 추가하여 총 6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총 1,891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4년도에 지원되는 예산 64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2,531억 원(국비 1,659, 지방비 872)을 투자함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에서 선도 투자로 주민주도의 촉진사업이 점차적으로 활성화 및 주민참여 유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별도로 대전시에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부진한 물리적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열악한 기성 시가지의 도시기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적극 건의 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 12월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사람·장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로, 각 구청 등 관련 공무원의 도시재생 업무역량 강화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대전시민대학에 도시재생대학 강좌를 개설,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선진 사례 등의 교육을 8월 말부터 실시하고, 도시재생 대상지역 내 다양한 사업주체(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

문가, 행정 등)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리더 발굴·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재생사업을 지원 및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7.06.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 차보다 사람 우선 '보행자우선도로' 시내 10개소로 확대

주거·상업·학교주변, 8개소 3개 유형으로 나뉘  
각 지역 특성 맞게 조성

서울시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sup>5</sup>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중구 동호로, 종로구 북촌로, 강동구 고덕로 등 8곳에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에는 차량 과속을 막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며, 바닥 재질을 보도블록으로 바꾸거나 굴곡도로, 벤치 설치, 무늬포장, 속도제한 등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도로 환경을 개선된다.

(8개소, 3개 유형으로 나뉘 각 지역 특성 맞게 조성)

올해 조성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종로·노원·은평·구로·금천·서초·강동·중구 각 1개소 씩 총 8개소로, 시는 △주거 △상업 △학교주변 지역 등 3개 유형으로 나뉘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주거지역'은 구로·금천·은평·중구 등 4개소로 이들 지역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생활권 도로로 주차여건이 열악해 상시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데다 평소 생활 이동이 많은 특징을

<sup>5</sup> 폭10m 미만의 도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되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려해 주민 안전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서초·노원·종로구 3개소에는 ‘상업지역’ 보행자우선도로가 조성되며, 이 지역은 도로를 중심으로 음식점,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이 들어서 있는 상업단지로 평소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보행자가 꾸준히 많은 곳이다.

‘학교주변 지역’으로 선정된 강동구 고덕로38길은 명일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로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주행하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속도를 낮출 수 있게끔 굴곡도로, 보도블록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8일(화) 2014 보행도시포럼 개최)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년 간 추진해 온 보행친화도시 추진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7.8.(화)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2014 보행도시포럼」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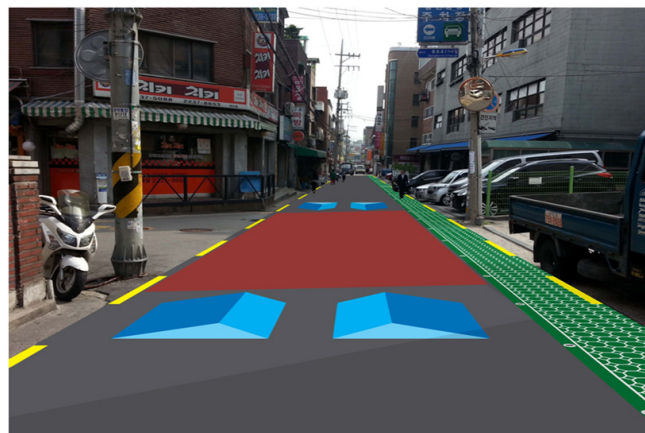
이 날 포럼에서는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아마존 시범사업 효과, 보행자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안 등에 대한 발제가 이뤄지고 보행 관련 전문가·관계 공무원·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0분가량의 전체 토론이 이뤄졌다.

#### (작년 조성한 보행자우선도로, 차량 통행속도↓ 보행만족도↑)

한편 지난해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된 구로구 개봉로3길과 중랑구 면목로48길을 2개월 간 운영한 결과, 이면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중 속도위반 및 불법 주차차량은 줄고 보행자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8곳의 추가사업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도로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주민, 전문가와 함께 마련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보행환경개선 사업

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개선사업 시행 후 개선 예시도(중구 동호로11길)

2014.07.06.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분양사업자와 투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 7.8.부터 8.1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완화)

- ①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② 수의계약 요건(신고면적 40%초과, 잔여면적 3천㎡ 미만, 공

개모집 2회 이상)을 폐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였다.

③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④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시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 관리(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하여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7.07.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부산시,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부산 만들기 시동

2014년 '보행친화도시 부산 원년' 선포, 다양한 보행환경개선 정책 추진

부산시는 자동차에서 사람중심의 도심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보행권에 대한 시민의식과 관심에 적극 부응해 2014년을 '보행친화도시 부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보행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등한시된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보행자의 수와 보행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교통 혼잡해소,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인 편익 창출을 위해 2014년을 '보행친화도시 부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에 돌입했다.

시는 이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5월) △보행환경개선지구시범사업 선정(7월)했으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8월) △보행친화도시 부산 비전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중앙공모(9월) △보행자 전용거리지정 시범운영(10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5월에 공포했으며, 앞으로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연차별 실행계획수립, 공공시설물 등 종합적인 보행환경정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환경개선 지구시범사업 선정은 총 11개 사업이 신청되어 지난 6월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의 특성과 개선사업에 적합한 6개 사업을 보행환경개선자문단에서 심의한 결과, 북구 젊음의 거리, 수영구 예술의 거리가 최종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2개 사업 지역은 8월에 부산시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초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함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비를 확보해 매년 2개소 이상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을 추진한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사람중심의 보행우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9월에 4대 과제 10대 사업 '보행친화도시 부산' 비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10월부터는 보행전용거리(차 없는 거리) 시범 추진으로 보행문화의 확산과 시민 여가 활동을 위해 주말에 시민공원, 서면주변 등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거리를 대상으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거리를 1회 이상 3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시범운영 기간 중의 성과를 분석해 전 구·군에 지역특성에 맞게 유형별 보행거리조성을 추진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군의 동참을 적극유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4년을 보행환경개선 원년으로 삼아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 시행, 보행친화구역 조성,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도심보행길 조성 등 획기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람중심의 보행문화를 확산시켜 누구나가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7.10.

.....부산광역시 교통운영과

##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국토부, 주택 감리제도 개선 대책 마련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사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 사항(①, ②), 고시 개정 사항(③, ④)

구분	주요 내용
①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자의 업무 착수 전 감리계획서 제출·보고 의무화</li> <li>△ 지자체의 감리자 업무실제 점검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li> <li>△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감리자 교체 및 감리자 선정 평가 시 반영</li> </ul>
②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감리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형벌기준 상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 벌금)</li> <li>△ 부실 설계자, 부실 시공자에 대한 형벌기준도 동일하게 상향</li> </ul>
③ 감리자 업무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 기록·관리 등 자체 품질관리 업무 구체화</li> <li>△ 검측점검표 작성·관리</li> <li>△ 설계변경 확인 및 기록·관리 절차 규정</li> <li>△ 사진 촬영 부위 및 방법 구체화 등</li> <li>△ 감리원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등이 신설</li> </ul>
④ 감리자 선정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및 업무수행실적 평가 변별력 강화</li> <li>△ 사업주체의 감리자 평가 가점 폐지</li> <li>△ 구조체 공사 시 감리원 추가 배치에 대한 가점 신설</li> <li>△ 초고층 주택 감리원에 대한 면접 실시 등</li> </ul>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하여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감리자 업무, 선정기준 개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7월 14일부터 행정예고(7.14.~8.4.)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7.10.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서울시, 한옥밀집지 서촌 '주민주도 마을재생사업'

10월까지 희망사업 공모...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필운대, 황학정, 창의궁터, 세종대왕 탄신지, 서울성곽 등 근현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이어져 내려오고, 한옥 722동이 밀집해 있는 서촌(세종마을) 일대 102만㎡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주도로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은 유지하면서 수대에 걸쳐 살고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보전, 정비, 재생 등 마을가꾸기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 실행 및 후속관리까지 하는 방법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시는 올해는 마을이 간직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주민 소통 프로젝트를 통한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 재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노후시설개선 및 공간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모든 사업은 주민 공모를 통해 이뤄지며, 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예산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측면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촌(세종마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에 참여할 주민 공모신청을 7월~10월까지 접수한다고 10일(목) 밝혔다.

이 일대는 2010년 한옥 보존을 내용으로 하는 「경복궁 서측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마을가꾸기 희망사업을 통해 단순히 외형적인 재생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재생이 이뤄지는 민관협력형 새로운 마을재생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민중심의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주민들

을 대상으로 청책토론회를 열고, 시 공무원이 상주하며 주민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현장소통방'을 개소해 지속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사업의 제안자격은 뜻이 맞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생활권자(대상지역에 소재한 민간단체, 사업장, 직장, 학교 등의 구성원)면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마을자원 조사 및 발굴, 마을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마을지도 그리기, 소식지 제작 등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마을 문화체험/교육/행사 개최, 주민워크숍, 마을잔치, 주민소통 프로젝트 등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저소득층 및 청소년 지원, 돌봄 육아, 방법/소방시설/노후주택 개선 및 점검활동 등 「마을특화 사업」 등으로, 사업제안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현장소통방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1개 사업 당 최대 1천만 원씩(주민 자부담 10% 이상 의무) 총 5개~1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등 행정지원과 사업 착수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규상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은 "서촌(세종마을)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 중 하나로 오랫동안 간직해온 역사와 옛 정취는 잘 보존하면서도 노후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주도의 마을가꾸기 희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을 통해 서촌(세종마을)일대를 서울의 대표 역사문화지역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7.10.

.....서울특별시 한옥조성추진반

## 북촌현장, '북촌, 아름다운 약속' 선포로 마을공동체 새 지평 연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현안을 자조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는 민·관 협력의 새 모델인「북촌협의회」를 창립하고, 북촌 현장 「북촌, 아름다운 약속」선언문을 선포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7월 18일(금),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북촌문화센터에서 「북촌협의회」창립 발족식을 개최한다.

「북촌협의회」의 창립 목적은 북촌이 정체성을 지닌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기 위하여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의 공동체적인 가치를 자치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함이다.

협의회는 주민들의 자생모임으로서 주민대표 12명, 전문가 7명, 행정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북촌주민들의 대표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북촌, 아름다운 약속」 선언문이 발표되는데, 선언문은 총론과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됐고, 내용에는 북촌의 관광지화, 상업화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 슬기롭게 논의,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북촌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에 발족되는 「북촌협의회」는 북촌주민에게는 주민 간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서, 그리고 서울시와 종로구에게는 북촌 주민의 대표 의견수렴 창구로 기능할 예정이다.

「북촌협의회」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북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 현안사항들에 대한 보고와 활동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북촌협의회」에 상정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주요 안건으로는 ① 북촌단체(법정, 자생단체)를 통한 주민 희망사항 ② 서울시, 종로구 사업(북촌지구단위계획, 환경개선 공공사업 등) ③ 전문

가 및 외부단체(도시연대, 내셔널트러스트) 제안사항 ④ 개별주민 10인 이상 요청사항 등 다양한 지역이슈들이 그 대상이다.

「북촌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가치 인식과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고 특히, 북촌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 주민 스스로 의견수렴 및 건의 등을 통해 자조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으며, 나아가, 북촌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민·관 협력이 확대되어 더 많은 마을의 문화와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7.1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종로구 자치행정과

##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5일부터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일정규모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 검토	△ 공작물 축조 신고 시 구조안전 점검표 제출 △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 교부 시 사용자 점검(방법)표 붙여 교부 △ 높이 13m 초과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받아 제출
② 건축물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	△ 난연성 마감재료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 시 대수선에 포함하여 대수선 허가
③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축기준 마련	△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강화 - 협력 대상 확대(기둥간격 30m → 20m) -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협력 받도록 의무화 (3층 /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 -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 △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건축심의 △ 특수구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및 그에 따라 유지·관리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7.1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 추진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미래 국토포럼」 1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7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산업·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과 모임(미래 국토포럼)을 갖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렌드(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의 성격, 정책시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부는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국토변화 예측 및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예: 10개 분야 50대/100대 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며, 최근 삶의 질 및 만족도 증시, 도시공간의 입체화·복합화에 따라 새로운 생활공간 창출방안, 도시·교통의 첨단화·디지털화, 생활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생활교통 개선방안, 첨단산업·물류 인프라 지원방안 등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미래대비 전략수립이 있었으나, 경제·사회적 측면에 치우쳐 국토에 초점을 맞춘 계획 수립은 미흡했기에, ‘국토’ 분야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비법정 전략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미래 국토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포럼 위원들은 미래 국토발전 전망 및 핵심전략, 과제 도출시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문조사 패널로 활동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국토·도시, 건축, 토지·주택 뿐 아니라,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일 포럼에서 포럼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장기적인 국토비전을 고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2040 또는 2050년을 목표로 국토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도 단기적인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한 단계 앞서 내다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한편, 금일 포럼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기존의 국토·산업·문화·정보통신 등 부문별 미래전망 및 전략보고서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미래 트렌드’와 이로 인한 ‘국토분야 영향’과, 미국, 유럽(독일, 스위스 등), 일본 등 ‘외국의 국토비전 수립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결과 활용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국토공간 변화패턴 분석과, 대국민 설문조사, 온라인 소통방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금년 말까지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4.07.1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서1동 희망오차마을공동체를 소개합니다!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우수 사례

부산시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115건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여러 사업 중 특히, 2010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서1동 희망오차마을공동체(이하 희망오차마을)’의 성과가 두드러져 주목을 받고 있다.

희망오차마을은 2011년 6월 창립총회를 통해 ‘새동네만들기추진위원회’라는 정식명칭과 회장, 총무, 운영위원 등 주민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7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희망오차마을은 마을 내 골목청소, 환경미화, 방범순찰, 장애인·독거노인 점심대접, 재활용품 판매 등 활발한 마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런 활동들을 인정받아 금정경찰서로부터 2013년 모범방범활동에 대한 감사장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모범봉사활동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희망오차마을은 시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마을 내 우편함 달기 운동’을 전개해 200개의 우편함을 설치했으며, 인근에 홀로지내는 어르신을 조사해 식사를 대접하고,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마을조기청소를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민교육 실시와 우수마을공동체를 방문해 마을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마을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존의 마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마을 벽화그리기 활동, 홀로어르신 및 장애인 문화관광체험 등 새로운 사업을 확대추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가 이번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자생적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5.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경제기반 창출 전략 제시

###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화) 오후 2시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항만·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공장 이전부지 등 개발 등과 연계하고, 도시의 특화된 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에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부족한 도시기능을 도입·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경제기반형 재생전략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번 설명회는 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정창무, 서울대), ②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김주진, LH연구원), ③ 중소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이재우, 목원대), ④ 향후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확대 계획(국토부)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회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창무 교수) 도시 경제발전전략 및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등 경제기반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관의 파트너십,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컨설팅, 규제완화 및 토지공급 등이 필요

(김주진 박사) △대도시의 경제기반형 사례 발표(독일, 프랑스, 일본) △대도시의 경제기반형은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전략적 지역에 대해 해당 도시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기능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등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자원을 집중해야만 성공 가능

(이재우 교수)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 다분히 대도시에 치우친 면이 있으며, 여건이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필요,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 등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된 산업을 육성할 때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외부 수요 등을 충분히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회복 가능

(국토부) △금년에 착수된 부산, 청주 등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16년부터는 일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5개가량 추진할 계획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도시금융법」이 제정되면,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이 가능 △쇠퇴한 도심 재생지구 등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등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선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대한 품평회(9월)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이 지자체 사업구상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4.07.1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신설경기장중 빙상경기가 열리는 빙상경기장 건설공사의 기공식이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김시성 도의장, 권성동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 주민 등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7일 16시 강릉 교동 스포츠컴플렉스 현지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빙상 전 종목경기가 개최되는 강릉에 경기장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됨을 축하하고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준비가 본격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통합기공식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2013년 4월 현상공모와 기술제안방식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4월과 6월, 책임감리사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시공사로 계룡건설산업과 태백건설산업을 선정하였다

사업내용으로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지상4층, 지하2층으로 12,000석, 아이스하키 남자 경기장은 지상3층으로 10,000석, 아이스하키 여자 경기장은 지상3층, 지하1층으로 6,000석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8,000석 규모로 건설된다.

사업비는 총 4,370억 원으로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1,361억 원, 아이스하키 남자 경기장은 1,078억 원, 아이스하키 여자 경기장은 620

억 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1,3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2017년 2월 시범경기과 2018년 본 대회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공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또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도 중앙정부, 조직위, 강릉시가 차질 없이 시범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착수할 계획이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수레· skeleton 트랙

2014.07.16.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 부산시,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 본격 가동

부산시 광역민간협의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한 구·군 민간협의체 창립 본격 지원

부산시 광역민간협의체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해 구·군 민간협의체 창립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란 부산의 마을만들기 구심체 역할을 위해 각 마을별로 활동하는 단체, 주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민간 네트워

크로 거버넌스 시대에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의 파트너 역할을 담당한다.

각 구별 마을공동체, 단체, 활동가가 협력해 기초(구·군 단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며, 기초(구·군 단위) 민간협의체 대표 및 위원이 모여 광역단위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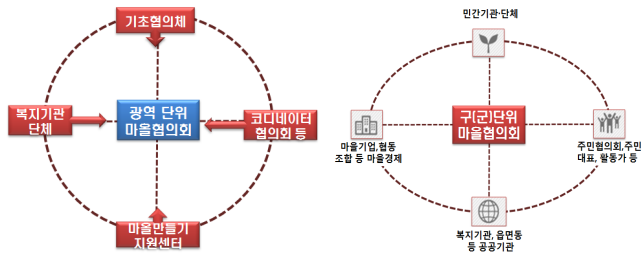
현재 3개구(동구, 북구, 부산진구)에서 민간협의체를 창립했으며, 4개구(중구, 서구, 금정구, 사상구)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 9개 구·군에서 민간협의체 창립하거나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면 구·군 민간협의체 대표들이 주축이 돼 광역민간협의체를 창립할 예정이다.

부산시 광역민간협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올해 10월 창립총회를 목표로 구·군 단위 민간협의체 창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광역민간협의체 준비위원회에서는 ‘사상구 민간협의체’ 창립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7일 오전 10시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사상구 민간협의체의 역할과 위상, 조직과 사업을 위한 원탁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상구 민간협의체 백승렬 준비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부산시 광역민간협의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사상구의 각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아울러 행정과 전문가, 민간협의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사상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지역현장의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의를 대변, 민간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광역, 지역 민간협의체 구성도

2014.07.16.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 행복주택 사업 본궤도 진입!

연내 2만 6천 호 사업승인 및 4천 호 착공

국토교통부는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행복주택 2만 6천 호를 사업승인하고 4천 호 이상 착공 한다고 밝혔다.

'14년 추진지구는 지자체·LH 제안 등을 통한 후보지 발굴, 지자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의 논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 되었으며, 사업승인 대상 2만 6천 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약 1만 6천 호(63%), 지방 약 1,0만 호(37%)이다.

수도권 지자체 별 분포를 보면 서울 약 4천 호, 인천 약 2천 호, 경기 약 1만 호 이고, 지방의 경우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약 6천 호,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 일반 시에 약 4천 호를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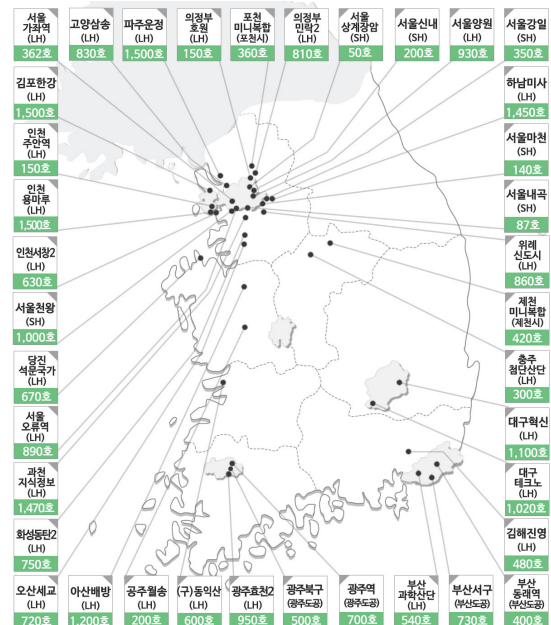
사업시행자 별 분포를 보면 LH가 약 2만 1천 호(80%),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약 5천 호(20%)를 추진한다.

서울 SH공사(약 2,000호), 부산도시공사(약 1,100호), 광주도시공사(약 1,200호), 경기 포천(360호), 충북 제천(420호) 등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직접 참여함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설자금 용자 금리를 현행 2.7% 에서 1.0%로 인하(약 1,740만 원 지원효과)해 주고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연내 사업승인 대상 2만 6천호는 설계용역 등 후속절차 진행 중에 있고 그중 4천 호 이상은 연내 착공하게 되며, 나머지는 '15년에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16~'18년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 호 공급은 본격 추진되는 올해 사업을 토대로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환영받는 행복주택 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14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2014.07.16.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행복주택기획과, 행복주택개발과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

'12년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sup>6</sup>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sup>6</sup>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16일(수)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용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다.

① 기존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부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 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공자 선정 방식은 정관에 따라 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관리제도에서 조합에 운영자금(최대 20억, 4.5%)을

융자하던 대로 지원하고, 건축공사비는 전체 공사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 2% 저리로 융자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전용 85㎡이하 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

서울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미분양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③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자금조달 능력·전문성 보완

④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길라잡이 배포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sup>7</sup>)」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7

<sup>7</sup> 기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 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sup>6</sup> 가로주택정비사업 :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월 1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자선도지구<sup>8</sup>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 완화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였다.

#### ②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③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 활용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법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며,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sup>8</sup>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

정착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사업시행자의 경우 기존에 민간 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7.17.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사업모델 시동 도시재생 연계형 소단위 행복주택 사업추진

국토교통부는 금년 2만 6천 호 사업추진 지구와는 별도로 도시재생과 연계·융합한 행복주택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성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남·창원·청주 등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단대동)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시유지에 행복주택 20호가 공급되며, 주민·NGO·정부·지자체·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한다.<sup>9</sup>

지난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창신·승인동, 창원 노산동, 청주 내덕동 등 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간 연계모델도 선보인다.

(서울시 창신·승인동) 근린재생형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뉴타운 해제지역 내 공·폐가를 활용해 지역의 중추 사업인 봉제산업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공동작업장·마을박물관 등을 연계 건설하여 주거안정과 공동체 활동 공간 구축의 거점시설로 주민과 함께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노산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시유지에 행복주택 20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마을광장 등을 지원하고 대상지내 이주가 불가피한 거주민을 대상으로 순환형 임대주택을 포함한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청주시 내덕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산업업 관련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실력 있는 젊은 문화예술인 유치와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보유 노후·불량 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송파구 삼전동) LH는 올해 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6개동 30호

<sup>9</sup> 국가와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설치,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 초기부터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NGO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이용시설을 결정하고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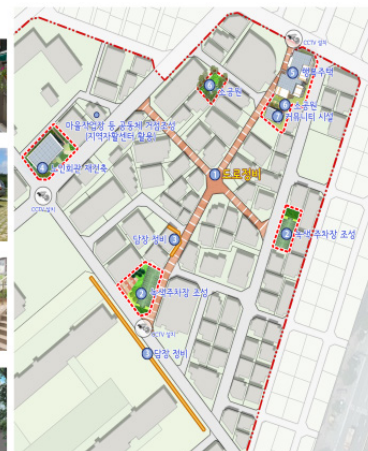
를 행복주택 1개동 50호로 재건축하는 것을 연내 착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공공보유 노후·불량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면서 젊은 층에게는 도심 내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 등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 추진 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부분



행복주택 건설부분



■ 성남시 단대동 사업 개념도

2014.07.17.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 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 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

국토부와 충청권 지자체, 규제개선 관련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7.17.(목) 대전·충남북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을 위한 제3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시도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관련 다음 규제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주택 입지에 대한 획일적 규정을 개선<sup>10</sup>

(현행)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 내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만 가능

(개선)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인접읍·면·동일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설치 가능하나,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sup>11</sup>

③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되는 산업단지에서 산단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sup>12</sup>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변경 기간 단축을 통해 산단 개발을 촉진

국토부는 앞으로도 강원·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14.07.17.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복도시 내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완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내달 5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 도시계획기준의 일몰기간이 만료돼 시행기간을 앞으로 3년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이 5% 이내 변경되는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10% 이내로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다만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 이내로 한정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 일정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나열되지 않은 용도는 불허했지만 개정안은 불허하는 용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14.07.18.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

## 숫자로 보는 '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 국토면적의 16.58%가 도시지역... 국민 91.58%가 거주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하였다.

2013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sup>10</sup>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14.12.)

<sup>11</sup>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14.12.)

<sup>12</sup> 「산단 인허가절차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14.10.)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6,106km<sup>2</sup>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593km<sup>2</sup>으로 이는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총인구 5,114만여 명 중 4,683만여 명이 도시지역(91.5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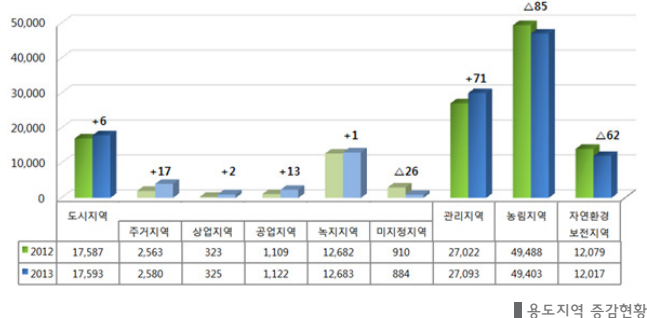
#### (용도지역 지정현황)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용도지역(106,106km<sup>2</sup>) 중 농림지역 49,403km<sup>2</sup>(46.6%), 관리지역 27,093km<sup>2</sup>(25.5%), 도시지역 17,593km<sup>2</sup>(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017km<sup>2</sup>(11.3%)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지역 17,593km<sup>2</sup>(16.6%) 중 녹지지역 12,683km<sup>2</sup>(72.1%), 주거지역 2,580km<sup>2</sup>(14.7%), 공업지역 1,122km<sup>2</sup>(6.4%), 미지정지역 884km<sup>2</sup>(5.0%), 상업지역 325km<sup>2</sup>(1.9%)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

전년(2012년)과 대비하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17km<sup>2</sup>), 상업지역(+2km<sup>2</sup>), 공업지역(+13km<sup>2</sup>) 및 녹지지역(+1km<sup>2</sup>)이 증가하고, 미지정지역(-26km<sup>2</sup>)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6km<sup>2</sup>가 증가하였으며, 관리지역은 71km<sup>2</sup>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85km<sup>2</sup>, 62km<sup>2</sup> 감소하였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455,660명(경기도 평택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837,57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5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721km<sup>2</sup>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196km<sup>2</sup>(32.7%)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등 방재시설 1,724km<sup>2</sup>(25.6%), 공원 등 공간시설 1,506km<sup>2</sup>(22.4%) 순으로 조사되었고,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면적은 전국에 1,406km<sup>2</sup>이며, 이 중 공원 등 공간시설이 771km<sup>2</sup>(5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이 425km<sup>2</sup>(30.2%)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14.07.2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 설문조사 실시

### 시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및 온라인 의견도 수렴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민 및 관계전문가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 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도시의 장기발전방향과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030년 울산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는 7월 2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1개월간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읍·면·동별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과 울산시 홈페이지



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20년 기준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토의 개발정책, 도시 및 산업여건 변화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도시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하위계획의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에 최종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2014.07.24.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저소득 주민의 오래되고 노후한 주택을 고쳐드립니다

2014년도 총 61억 투입, 2,048호 개보수 추진

전라북도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4년도에 총 61억을 투입, 2,048호의 저소득주민 노후주택개보수를 위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2013년 목표물량 1,666호보다 23% 증가된 물량이며 주민들이 하루 빨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48호에 대한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총 40억을 집행하여 1,392호에 대한 주택개보수를 완료하였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주민의 노후주택을 고쳐주어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자활능력조차 없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 주민의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총 451억 원을 투입하여 13,567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완료하였다.

특히 2013년도부터 호당 지원 금액이 가구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됨으로서 비교적 보수범위가 큰 개보수도 추진하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더욱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보수 유형을 보면 도배·장판이 4,421호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가 있어 안전이 우려된 지붕보수가 3,243호로 약 23%, 보일러 및 창틀 보수가 2,903호로 21%, 화장실 개량이 1,342호로 10%, 기타 벽체, 바닥, 부엌 등을 개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소득 계층 간 양극화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더 많은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이 필요로 하는 한 지속적으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7.24.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 상반기 우리국토 얼마나 변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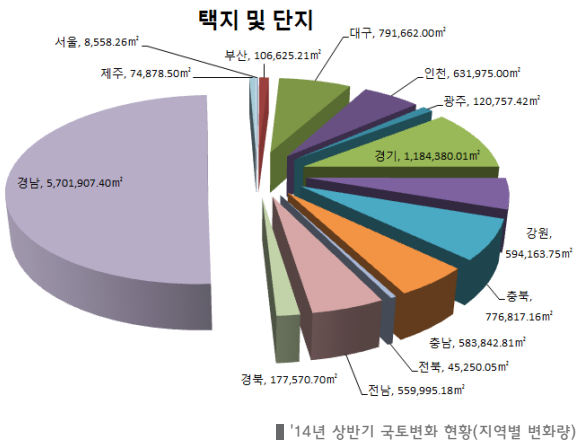
국토지리정보원, '14년 상반기 국토변화정보 공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상반기 국가기본도에 반영한 국토의 주요변화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향남리-양강면 요당리 구간 국도82호선, 신니-노은간 등 396개 도로개통, 강원 원주 혁신도시, 김해 롯데 워터파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104개 택지개발, 수원시 팔달구청, 제주 우주항공박물관 등 1,634개 건물 준공, 빛가람대교, 묘도교 등 160개 명칭 등을 국가기본도에 반영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14년 상반기 주요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변화사항을 살펴보면 도로·철도의 경우에는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택지·단지의 경우 경남, 경기, 대구 순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3.0정책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본도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구축된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 서비스할 계획이다.



2014.07.2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공사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다!

국토부, 모든 건설주체가 함께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7.24.(목)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14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sup>13</sup>를 새롭게 도입할 뿐 아니라,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대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관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계단계)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 도입

(착공단계)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

(시공단계)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

### ②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

<sup>13</sup> DFS(Design for Safety, 영국)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사,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15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 ③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체계 강화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 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7.2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건설현장, 시공부터 준공까지 ‘안전 집중관리’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확정

(시공사·감리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식을 발주청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정부는 7.24.(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자가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명시하는 DFS<sup>14</sup>를 의무화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며,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청 및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및 공표’ 등을 실시하여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와 고용부간의 적극적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여 초기에 착공정보를 파악, 적시점검과 안전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건설주체들이 ‘안전은 규제이기 이전에 기본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 노력”을 당부했다.

2014.07.2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가능할 듯 따복마을 탄력 받아

경기도 개선안, 국토해양부 전폭 수용, 조만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경기도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sup>14</sup> DFS(Design For Safety, 영국)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폭 수용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건의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도가 제시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지난 달 중순부터 경기도와 인천, 천안 지역의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을 실사한 결과, 필로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많고 폐자전거 방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을 확인하는 한편 실제 아파트의 주인인 입주민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등 수요에 맞는 북카페, 주민 사랑방, 어린이 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입주민 만남의 장소 등 공동체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토부에서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법령이 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돼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 간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좌)아파트 필로티 미활용 사례, (우)아파트 필로티 활용 사례(북카페)

2014.07.27.

.....경기도 주택정책팀

### ‘공간정보 인재 육성·지원사업’ 협약 체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특성화고 3곳과 상호 협약식 가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와 공간정보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약식을 7월 29일(화)에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인력양성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해당 학교(서울디지털대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 간에 이뤄진다.

협약이 체결되면,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에 학교당 연간 약 1억 원씩 5년간 학교지원금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는 공간정보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수행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ICT, 모바일 등 첨단 기술과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는 국민행복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DB/SW 기술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양성사업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 미래의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4.07.28.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 당신의 아이디어가 곧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한 논문공모전' 실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제2회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은 관련 분야의 창의적인 제도개선과, 다양하게 축적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원·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논문공모전 접수는 7월 29일부터 8월 19일이며, 논문제안서 심사(결과발표 8.26.)를 통과한 팀이 작성한 논문에 대해 11월 28일로 예정된 한국분석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거쳐 최종 논문심사(12.6.~12.11.)를 실시하여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정부 3.0시대와 가격공시자료의 학술·정책적 활용 방안 △감정평가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2가지 주제로 전문가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차 논문제안서 심사에서 통과한 부문별 5개 팀에게는 논문진행 비용을 지원(전문가 200만 원, 대학(원)생 100만 원)하고, 학술대

회 논문발표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4개 팀에게는 최우수상 1건(국토교통부장관상, 200만 원), 우수상 3건 (한국감정원장상 100만 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상 100만 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상 1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원)생 부문의 우수작 시상자가 한국감정원에 입사 응시(3년 내)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 등의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전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감정평가분야에 대해 전문가, 대학생 등의 학술적 관심을 높이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산업 관련 학회(부동산분석학회), 공공기관(한국감정원), 업계(감정평가협회)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도모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한국감정원: 053-6638-8205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02-3465-9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07.28.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체육시설 가장 필요한 지역은? '서울 정책지도' 개발

### 각종 기초 데이터+GIS기법 융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

서울시가 다양한 정책과제들의 해법을 지도에 표시된 공간정보로 찾기 위한 '서울 정책지도'를 개발했다.

서울 정책지도는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해 탄생한 것으로, 시가 보유한 각종 기초적인 행정데이터와 GIS기법(지리정보시스템)을 결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로 다각도의 세밀한 분석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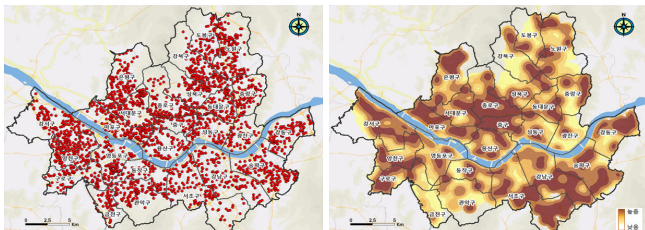
수요자가 많은 곳, 실제 정책을 필요로 하는 곳,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민들은 내 집 주변의 사회서비스 시설 공급현황은 물론 타 지역과 차이를 한 눈에 확인,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 1호 '서울 정책지도'를 시 도시계획국이 추진하고 있는 '10분 동네 프로젝트'를 주제로 제작, 스마트서울맵 앱 및 서울지도 홈페이지(<http://gis.seoul.go.kr>)를 통해 28일(월)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번 10분 동네 프로젝트 서울 정책지도를 제작하면서 서울시 전체 인구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총 1만 4,371개소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각각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공간분석 기술을 적용해 연령별 인구밀집도, 도보접근권역도, 향유도, 수요예측도 등을 도출, 지역 간 차별 없는 균형적인 시설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시 전역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1인당 적정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향유도'로 접근했을 때는 도서관과 공원이 각각 55%와 5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은 도서관과 소규모 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좌) 공원 시설위치도, (우) 공원 향유도

서울시는 이러한 인구밀집도, 도보접근권역도, 향유도 등을 종합해 해당 시설의 우선 설립 필요지역을 분석하고, 이를 앞으로의 시설확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서관의 경우 광진구 구의동·자양동 일대 등 13개 구 22개동이 우선 설립 필요지역으로 도출됐고, 어린이집은 종로구 평창동 등 13개 구 22개 동,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은평구 대조동 등 7개 구 14개 동, 공원은 관악구 보라매동 등 13개 구 19개 동, 공공체육시설은 강서구 화곡 제1동 등 12개 구 18개동에 우선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안전·복지·문화·소통·경제·환경 6개 분야 180여 종의 정책지도를 제작·공개할 계획으로, 서울백서, 시정운영계획,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정책지도에 알맞은 주제를 발굴하고, 이밖에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등의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들도 분석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지도를 제작하는 데 집중한다.

향후 정책지도는 서울시 중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자료,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가시적으로 분석하는 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서울 정책지도는 고도의, 세밀한 현미경 행정을 가능케 하는 토대로서,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게 돼 시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지도를 개발해 행정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시민들도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14.07.28.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단, 시설계획과

## 뉴타운 해제 '창신·송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서울시, 29일(화)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도시재생 방향 제시

7년간 묶여 있던 뉴타운 지구 해제를 완료한 창신송인 일대가

2017년을 목표로 대안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창신승인 일대는 서울시내 35개 뉴타운 중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전국 13개 ‘도시재생 선도 지역’ 중 사업을 본격화하는 첫 사례다.

서울시는 29일(화) 종로구 창신동에 「창신승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사업 제안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사업 시행까지 주민주도와 공감으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걸 맞는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는 공공조직으로, 창신승인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렴한 주민·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7년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면 철거 위주의 뉴타운이 물러난 창신승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거·산업·사회·문화가 함께 고려된 지역자산 맞춤형의 통합재생을 입힘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모델로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서울시 관련 10개 센터의 역량도 창신승인 지역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자생력 확보 △동대문패션산업과 봉제 전통산업을 연계하되 동대문과 차별화된 창조산업 생산기지 육성 △지역특성 고려한 주민 공유 거점 공간 확보, 성곽마을 관광자원화, 골목길 명소화를 제시했다.

#### (8월부터 주민들이 공모사업 신청→사업 실행~회계처리까지 지원)

주민공모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주민동아리 만들기, 실버합창단, 마을 해설사, 벼룩시장, 마을축제, 마을음악회 등)과 소규모 환경개선 분야(평상 만들기, 옥상텃밭, 벽화 그리기, 화단 가

꾸기 등)가 있으며, 재생센터에서는 아이디어 상담, 제안서 작성, 제안사업 실행, 회계처리까지 지원한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도 함께 진행하며, 공동체 활성화 분야(아동·청소년마을기획단, 봉제여성문화체험, 청소년문화체험 등)와 산업경제 활성화 분야(창신승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지속가능한 봉제산업 등)가 있다.

#### (봉제산업, 청년 유입 활성화하고, 동대문패션산업과 연계·시너지)

패적인 작업공간 제공, 기술교육을 통해 지역 전통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 소공인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와 인접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유입을 유인하며, 10분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해 소단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등하게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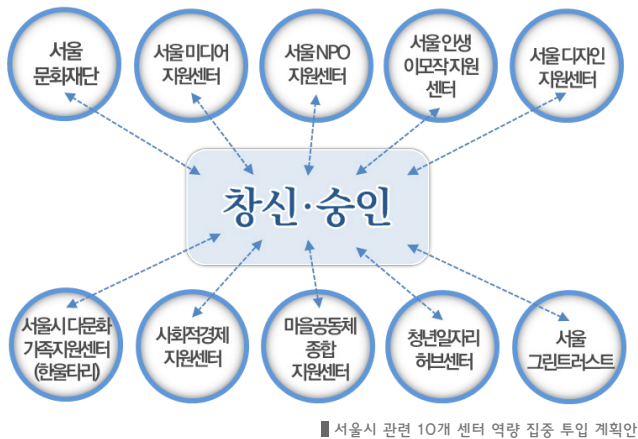
#### (도시재생지원센터 '17년 주민 자립운영하는 지역재생기업으로 전환)

이번에 문을 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작은 공공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주민이 스스로 자립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지역재생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도시재생기반 구축단계로 주민화합 및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공모, 지역 맞춤형 거점 확보를 통해 주민모두가 참여해 마을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 센터 내에 재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활동가 육성, 지역 맞춤형 교육을 인큐베이팅 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창신승인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사업 첫 사례”라며, “공공과 주민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해 서울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서울시 관련 10개 센터 역량 집중 투입 계획안

2014.07.29.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 ‘HOPE 프로젝트’로 희망을 건축한다!

제5호 ‘HOPE 프로젝트’ 착수, 대상자는 투병 중인 국가유공자 노인 부부

부산시와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건축계의 힘을 모아 지난해 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거역량강화사업인 ‘HOPE<sup>15</sup>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HOPE 프로젝트’는 기업의 재원기부와 건축가의 건축설계 재능기부로 자립이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계층이 거주하는 33㎡ 내외의 소규모 주거를 개선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갑작스러운 화재발생으로 오갈 곳을 잃은 범일동 노인 부부, 몸이 불편한 문현동 홀몸노인, 뇌졸중으로 쓰러져 생계가 막막해진 대청동 부녀의 주택을 준공했고, 올해는 화재발생으

로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실의에 빠졌던 가장의 아파트와 인접 화재피해 3세대 주택의 복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HOPE 프로젝트의 제5호 주택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 노인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30년이 넘는 남구 문현동의 백○○(남, 81세)씨의 주택이다.

노인연금만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백씨는 본인도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중병으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투병 중인 아내를 함께 돌보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35㎡ 규모의 노후 주택으로, 백씨는 “화장실과 세면실이 모두 집 밖에 있어서 환자를 씻기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나도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비를 맞으면서 씻어야 한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말했다.

제5호 주택은 2009년 설립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롯데삼동복지재단의 재원후원과 2013년 부산신인건축가상을 수상한 오신욱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라움)의 재능기부로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며, 7월 말 공사에 착공해 8월 말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욱 HOPE 프로젝트 운영위원장은 “이번 주택 외에도 기부와 후원을 약속하신 기업과 건축가들이 계시며, 올해 하반기에도 3~4개 프로젝트를 더 계획하고 있고, 적합한 사업 대상자를 찾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HOPE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관할 구청과 주민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히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7월 말부터 운영되는 HOPE 프로젝트 공식홈페이지(<http://hope.biacf.org>)의 사연신청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청과 추천이 가능하므로, 상생의 나눔 복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HOPE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인 추천을 당부했다.

<sup>15</sup> HOPE(House of people's empowerment): 서민주거역량강화를 위한 집,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축을 통해 희망을 전하자는 의미 내포



2014.07.30.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

■ 입주자격 세부기준

## 젊은 계층이 사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까지

### 젊은 계층에게 80% 공급,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가 선정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②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
- ③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 제한(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6년,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
- ④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6</sup>

계층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 <sup>16</sup> 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내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 인근 직장내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7.3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sup>16</sup>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검토 추진

울산시, 의회권고제도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등

울산시는 총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권고 제도'에 따라 실시됐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시설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시설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의회는 보고된 사항을 검토 후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계 법령에 의한 부분별 계획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획되어 있어 실제 해제 대상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 10년 이상 ~ 3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90여개 시설, 4,900만㎡에 이른다.

2014.07.30.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서울시, '심의 단축·기준 완화' 공공주택 8만 호 공급 박차

서울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국 최초 제정

서울시는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3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규칙이나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공공주택 공급 관련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격상한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으며, 조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 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 기존 9개 위원회 개별 심의에서 변경 후 통합적이고 신속한 심의로 심의기간 최소 6개월 단축 기대
- ②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 공급 기본계획의 정기적인 수립으로 공공주택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을 수립
- ③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 시가 개발한 장기안심주택의 종류, 지원범위, 임대임대기간 등을 지침에서 조례로 법제화
- ④ 매입 원룸 q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
- ⑤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 공공주택 건설



시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 20% 추가 적용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①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로 정하고 현행『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폐지

②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위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 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 신청<sup>17</sup> → 구역지정은 통합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확정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성실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데 이어 이번 조례·시행규칙 최초 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를 기틀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14.07.31.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sup>17</sup>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은 구청장 신청 없이 자동 지정 신청된 것으로 봄

#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연구동향 분석

박주희\_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최근 각종 범죄의 발생 증가에 따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기본 권리이며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범죄는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sup>18</sup> 건축 및 도시계획적 방법을 통해 적절한 공간과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 이하 셉테드)의 개념은 도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공간환경에서의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것<sup>19</sup>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 경찰청에서 처음 셉테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도입이 시작되었다.<sup>20</sup>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판교, 광교 등 신도시 개발계획과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계획 등에 셉테드 기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 반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공장 밀집지역인 금천구 일대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로<sup>21</sup> 하는 등 그동안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범죄예방디자인은 공장지대, 공원 등으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그림 1.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례(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sup>18</sup> 이재용 외(2014), 국토정책 Brief-범죄발생의 공간특성을 고려한 도시안전망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sup>19</sup> 유광흠 외(2012),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

<sup>20</sup> 유광흠 외(2012), 전게서, p47-48

<sup>21</sup>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0297&act=VIEW&boardId=20297](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0297&act=VIEW&boardId=20297), 서울시 보도자료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에서 셉테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나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에 한국셉테드학회가 설립되면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셉테드는 건축·도시분야 외에도 범죄학, 경찰학, 행정학, 사회심리,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건축·도시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번 이슈와 연구동향에서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주제별 연구결과를 요약해 소개하는 정성적 분석 방법이 아니라, 셉테드 관련 논문의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다.<sup>22</sup>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하나로 의미나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sup>23</sup> 따라서 키워드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셉테드 연구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핵심키워드와 연구주제를 파악하고, 연구자간 협력 관계(공저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셉테드 관련 핵심 전문가 집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셉테드 연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범죄불안감’으로 범죄불안 요인 분석 및 감소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범죄안전성’으로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대학교캠퍼스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성평가 및 평가지표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공동주택단지’로 단지 외부공간과 공동공간, 지하주차공간에 대한 계획 및 조명계획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많았다. 그밖에 ‘CCTV’와 ‘범죄다발지역’, ‘범죄율’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한편, 셉테드 연구의 핵심 전문가는 강석진(서울과학기술대)과 이경훈(고려대학교), 하미경(연세대), 강부성(서울과학기술대)으로 각각 소속된 기관(학교)을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련 논문 발표 현황

분석대상 논문 선정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에서 제공하는 문헌정보 DB로부터 제목, 부제목, 키워드에 ‘범죄’, ‘범죄예방’,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라는 용어가 사용된 논문목록을 추출하였으며, 원문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2000년부터 최근(2014년 6월말 기준)까지 발표된 165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도별 논문발표 현황을 살펴보면(그림2 참조), 2006년까지는 셉테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7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09년부터는 꾸준히 20개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2005년에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배포하고 각종 개발계획에 셉테드 도입이 추진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셉테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up>22</sup> 분석도구는 NetMiner 4를 사용함

<sup>23</sup> 이동호(2013), 국내 수산관련 기업의 주요 경영철학에 대한 내용분석, 수산경영론집 44권 3호, p 91

## 이슈와 연구동향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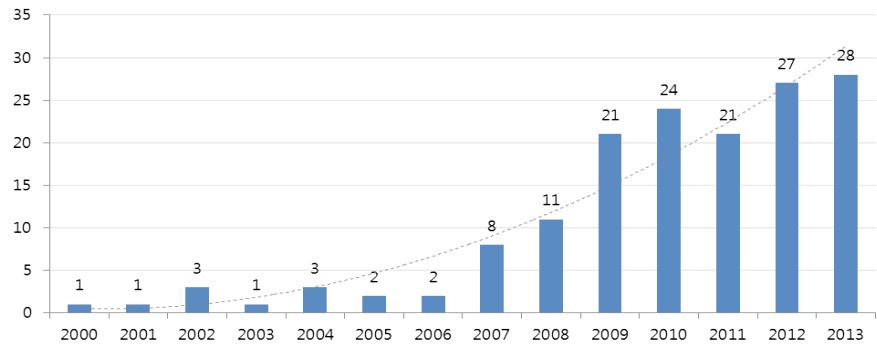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발표 논문 수(2014년 제외)

논문 발표기관별로 살펴보면, 논문집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합한 전체 논문 수는 대한건축학회가 58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국셰테드학회(34개)로 셰테드 분야 연구를 위해 설립된 학회인 만큼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에서 각각 10개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중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만 살펴봤을 때에도 대한건축학회가 36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셰테드학회 26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9개, 한국도시설계학회 7개, 한국주거학회 6개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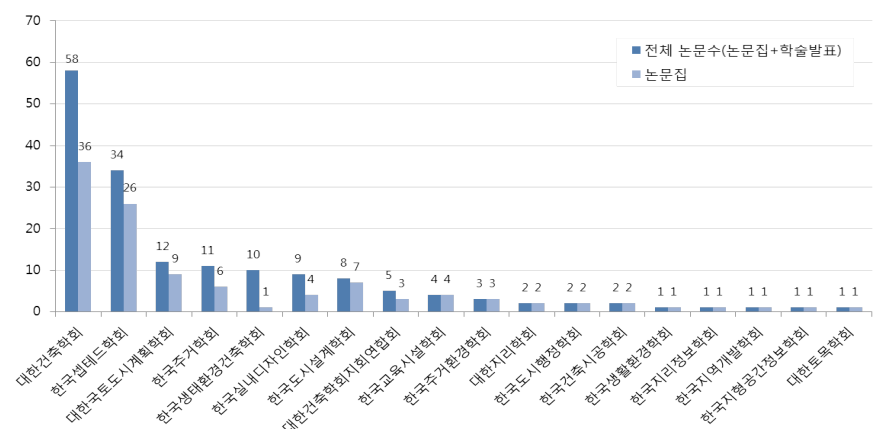


그림 3. 논문 발표기관별 논문 수

##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관련 키워드 및 공저자 네트워크분석 결과

### 1. 키워드 네트워크

셉테드 연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각 논문에서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분석을 시행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먼저 컴포넌트 분석을 통해 키워드간 그룹 형성 및 밀도<sup>24</sup> 등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하고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 표 1. 키워드 빈도수(빈도수 4이상)

키워드	빈도수
범죄불안감	38회
범죄안전성	16회
공동주택단지	14회
공동주택	11회
CCTV	9회
학교	
범죄율	
평가	7회
외부공간	
범죄다발지역	
만족도	
공간구문론	6회
지표	
방범환경	
공간자기상관성	
초등학교	5회
가이드라인	
범죄발생공간	
단독주택지	
환경설계	
체크리스트	4회
환경계획	
주거지역	
환경범죄학	
학교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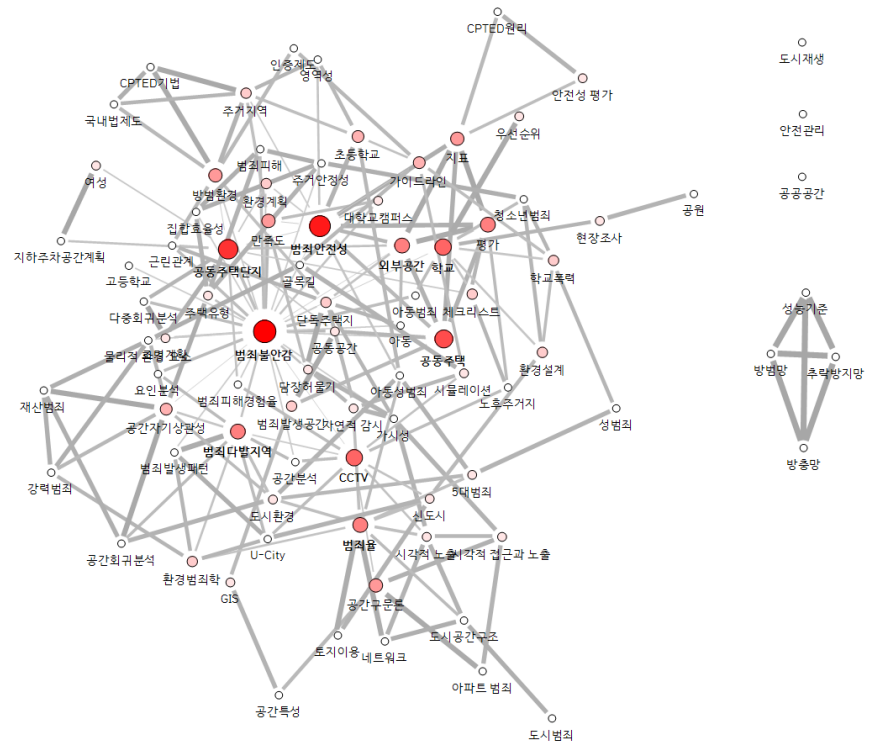
분석대상 논문에 제시된 키워드의 유형은 총 750개로, 여기에는 동일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표기되거나 국문과 영문이 중복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키워드 재조정을 통하여 294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 추출을 위해 검색키워드로 사용한 ‘범죄예방’과 ‘범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제외하였다. 네트워크분석은 이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의 논문에 등장한 85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 전체 네트워크 특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2개의 컴포넌트가 형성되었다. 이중 가장 큰 메인컴포넌트는 범죄불안감, 범죄안전성,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78개의 키워드와 191개의 연결이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밀도는 0.064로 낮게 나타났다. 키워드들의 상관관계를 연결하여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4와 같다.

그림에서 노드의 크기는 논문에 등장한 키워드의 빈도수에 비례하며, 연결선이 굵을수록 각각의 키워드가 한 논문에 동시에 등장한 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표1과 그림4에서와 같이 셉테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범죄불안감’이다. 다음으로는 범죄안전성 > 공동주택단지 > 공동주택 > CCTV, 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키워드 빈도수가 높을수록 셉테드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이라 할 수 있다.

<sup>24</sup> 밀도=2L/N(N-1), N=전체 노드수, L=전체 링크수. 네트워크 밀도는 0과 1사이의 수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높음



■ 그림 4.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 중심성 분석

중심성 분석은 특정한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드(키워드)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sup>25</sup> 네트워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성 지표인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sup>26</sup>과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sup>27</sup>, 매개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sup>28</sup>을 분석하였다.

<sup>25</sup> 박영섭 외(2010), 사회연결방분석을 이용한 건축분야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10호, p151

<sup>26</sup> 직접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높아짐.

<sup>27</sup> 영향의 즉효성을 측정. 평균적으로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가 짧은 노드의 중심성이 높음.

28 정보 및 영향력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력 측정. 다른 노드간 연결을 매개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매개중심성이 높음.



표 2.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표

중심성 지표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중심화	상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85	0	0.405	0.055	0.049	35.8%	범죄불안감, 범죄안전성, 공동주택단지, CCTV, 범죄다발지역, 범죄율, . . .
근접 중심성	85	0	0.535	0.302	0.099	43.6%	범죄불안감, 범죄안전성, CCTV, 범죄다발지역, 공동주택단지, 학교, . . .
매개 중심성	85	0	0.452	0.019	0.053	43.8%	범죄불안감, 학교, 범죄안전성, CCTV, 범죄율, 공동주택단지, . . .

표2는 중심성 지표에 따른 통계 값과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나타낸 것이다. 세 가지 중심성 분석 결과, 모든 지표에서 ‘범죄불안감’이 가장 중심성이 높았으며 중심성 값도 다른 상위 키워드들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표3 참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셉테드 연구에서 ‘범죄불안감’을 연구 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연구주제와 연결된 키워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범죄불안감’ 다음으로 범죄안전성 > 공동주택단지 > CCTV > 범죄다발지역 > 범죄율 > 학교 > 공간자기상관성 > 방범환경 > 단독주택지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셉테드 연구의 주 공간적 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지 등 주거지역과 학교이며 범죄불안감 감소방안과 범죄안전성 평가, CCTV, 범죄다발지역, 공간특성 범죄율 등을 주제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근접 중심성은 범죄불안감 > 범죄안전성 > CCTV > 범죄다발지역 > 공동주택단지 > 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은 범죄불안감 > 학교 > 범죄안전성 > CCTV > 범죄율 > 공동주택단지 순으로 ‘학교’가 다른 중심성에 비해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에 나타난 키워드들은 순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 가지 중심성 지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즉, ‘범죄불안감’이 연결성과 근접성, 매개성이 가장 높은 핵심키워드이며, 그밖에 ‘범죄안전성’, ‘공동주택단지’, ‘CCTV’, ‘범죄다발지역’, ‘범죄율’, ‘학교’ 등이 공통적으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표 3. 연결 중심성

순위	키워드	Degree Centrality	순위	키워드	Degree Centrality
1	범죄불안감	0.405	16	도시환경	0.071
2	범죄안전성	0.167	17	지표	0.071
3	공동주택단지	0.155	18	자연적 감시	0.071
4	CCTV	0.119	19	가시성	0.071
5	범죄다발지역	0.119	20	시각적 노출	0.071
6	범죄율	0.119	21	아동성범죄	0.059
7	학교	0.107	22	주택유형	0.059
8	공간자기상관성	0.095	23	주거안정성	0.059
9	방범환경	0.095	24	담장허물기	0.059
10	단독주택지	0.095	25	물리적 환경 요소	0.059
11	외부공간	0.095	26	초등학교	0.059
12	주거지역	0.083	27	학교폭력	0.059
13	공동주택	0.083	28	U-City	0.059
14	평가	0.083	29	환경범죄학	0.059
15	가이드라인	0.071	30	신도시	0.059

## 핵심 키워드별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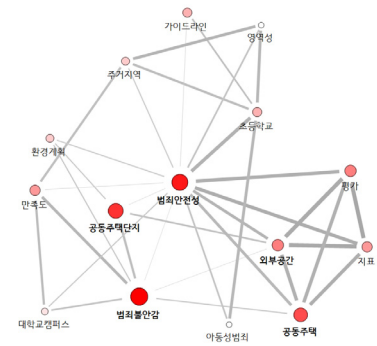
앞의 전체 네트워크 그림(그림4)에서는 키워드간 연결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네트워크를 그려 키워드간 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나타냈다.(그림5~10)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범죄불안감은 그림5와 같이 매우 다양한 연구주제(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안전성(그림6)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공동주택, 외부공간, 평가, 지표와 관련된 연구주제가 많았으며, 공동주택단지는(그림7) 범죄불안감, 조명계획, 다중회귀분석, 외부공간, 지하주차공간계획과 관련된 연구주제와 연결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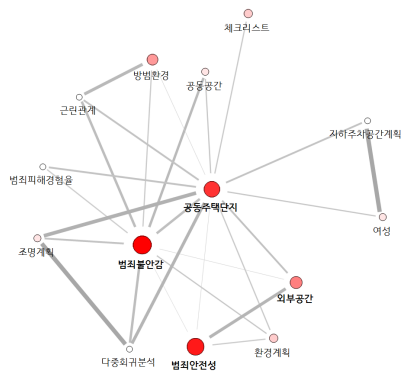
다음으로 CCTV는(그림8) 공간분석, 노후주거지, U-City, 범죄피해경험률,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주제가 많았으며, 범죄다발지역은 범죄발생패턴 및 공간회귀분석, 공간자기상관성 등 공간분석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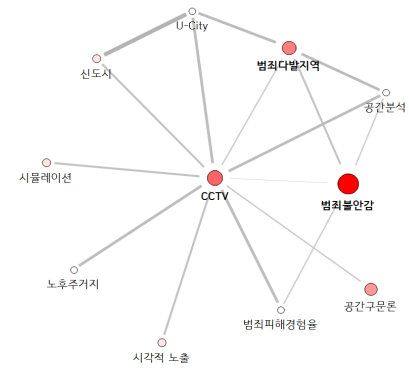
■ 그림 5. 범죄불안감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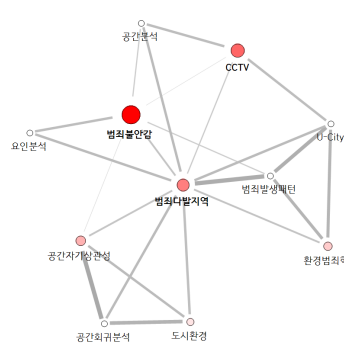
■ 그림 6. 범죄안전성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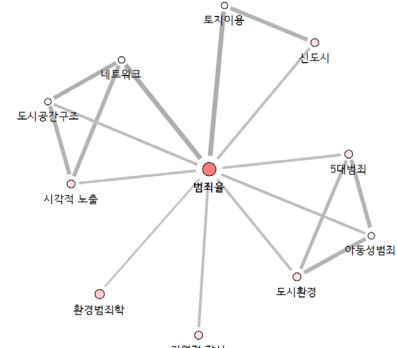
■ 그림 7. 범죄불안감 키워드 네트워크



■ 그림 8. CCTV 키워드 네트워크



■ 그림 9. 범죄다발지역 키워드 네트워크



■ 그림 10. 범죄율 키워드 네트워크

## 2. 연구자(공저자) 네트워크

웹테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전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자별 논문 발표 현황과 컴포넌트 분석을 통해 연구자간 협력 관계(공저자)를 알아보았다.

분석대상 논문의 총 저자 수는 205명이었으며, 이중에서 강석진(서울과학기술대)이 24개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하미경(연세대) > 이경훈(고려대) > 이유미(상명대), 이효창(연세대) > 변기동(연세대) 순으로 나타났다(표6 참조).

저자 소속별로 살펴보면 연세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6. 저자별 논문 수(4건 이상)

NO	연구자	소속	논문 수
1	강석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4
2	하미경	연세대학교	21
3	이경훈	고려대학교	18
4	이유미	상명대학교	10
	이효창	연세대학교	10
5	변기동	연세대학교	8
6	송정화	남서울대학교	7
	이승재	고려대학교	6
7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오건수	남서울대학교	6
	정성원	세종대학교	6
	최재필	서울대학교	4
	박현호	용인대학교	4
	박승훈	계명대학교	4
	허선영	경상대학교	4
8	문태헌	경상대학교	4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4
	김대진	연세대학교	4
	원선영	연세대학교	4
	김나연	연세대학교	4



네트워크분석은 이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의 논문에 등장한 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61명중 55명이 공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6명은 연결이 없는 단독저자이다. 또한 그림11과 같이 총 16개의 컴포넌트가 형성되었으며, 각 그룹간에는 연결 관계가 없는 독립된 그룹 형태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중심성 분석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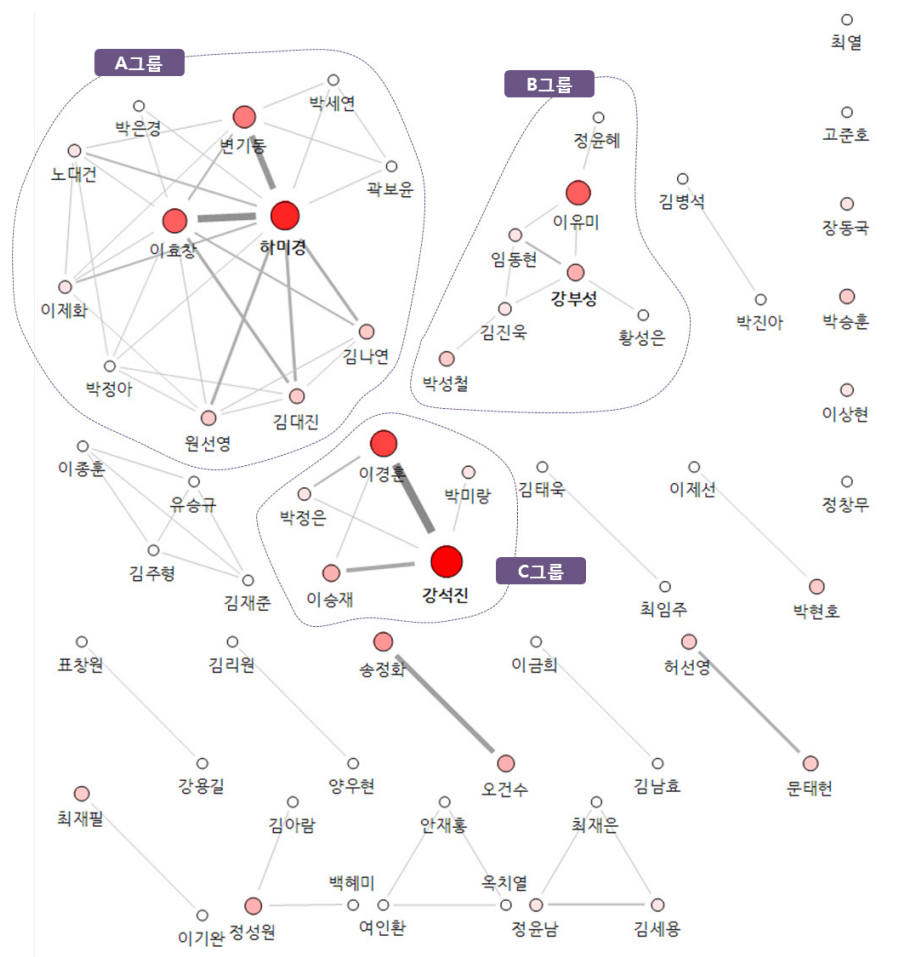


그림 11.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는 3개의 그룹을 살펴보면, 먼저 A그룹은 하미경(연세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소속 연구자들이 속한 그룹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총 12명의 저자와 32개의 연결(공저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밀도는 0.485로 나타났다. 하미경은 그룹 내에서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이 가장 큰 중심 연구자로 나타났으며, 이효창(연세대)과 변기동(연세대)이 그 다음 중심연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그룹은 강부성(서울과학기술대)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상명대, 고려대 소속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네트워크 밀도는 0.381로 나타났다. 강부성은 그룹 내에서 이유미(상명대) 보다 논문 수는 적지만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이 가장 큰 중심 연구자이자 3개의 다른 소속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그룹은 강석진(서울과학기술대)과 이경훈(고려대)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한남대학교 소속의 연구자들이 속해 있다(네트워크 밀도 0.6). 강석진 역시 그룹 내에서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이 가장 큰 중심 연구자로 나타났다.

## [CPTED] 관련 주요 논문리스트

제목	저자	수록지	연도만	권호
1 아동성범죄 발생지의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물리적 환경 개선양상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분석	김아람 ; 정성원 ; 전한중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4	v.25 n.1
2 필로티형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가로환경이 보행자의 범죄 및 교통사고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이소연B ; 김재철	국토계획	2014	v.49 n.1(통권 203호)
3 편의업종의 확산이 범죄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지현 ; 유상균 ; 정창무	국토계획	2014	v.49 n.1(통권 203호)
4 실태조사에 따른 기존 학교의 CPTED 기법 적용방안 연구	이원호 ; 이승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v.34 n.1
5 단독주택지 담장의 유무에 따른 범행 수월성 분석 연구	김병석 ; 박진아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14	v.27 n.1
6 아동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의 환경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종혁 ; 권주영 ; 변기동 ; 하미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통권26호(v.14 n.1)
7 범죄불안심리 감소를 위한 아파트 단지계획 실태조사 연구	진경일 ; 송형주 ; 박종기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통권26호(v.14 n.1)
8 안전한 골목길 공간조성에서 CPTED(범죄예방) 적용방안 및 원칙에 따른 시뮬레이션	강승영 ; 손광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제16권 1호
9 CPTED 도입을 통한 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개선 방안	김상훈 ; 한혜련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제16권 1호
10 CPTED관점에서 살펴본 아파트단지 내 시설 및 공간에 관한 연구	최임주 ; 김태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14	v.16 n.02 (통권60호)
11 학교침입 취약지점 분석을 위한 감시취약 침입경로도 적용에 관한 연구	권지훈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14	v.16 n.02 (통권60호)
12 주택유형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승훈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4	v.25 n.3
13 대학캠퍼스공간에서 여대생이 느끼는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	이유미	교육시설(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3	v.20 n.1
14 단독주택지 담장허물기 사업 후 물리적 변화요소가 자연적 감시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병석 ; 박진아	도시설계(한국도시계획학회지)	2013	v.14 n.3(통권 제57호)
15 미래 학교시설을 위한 CPTED 변화	박성철	교육시설(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3	v.20 n.5
16 국내 초등학교의 CPTED 적용여부와 학교 폭력 피해율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황희준 ; 이승우 ; 박현구	교육시설(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3	v.20 n.6
17 CPTED관점에서 안전한 공원 조성방안 연구	강석진 ; 박미량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	v.29 n.3
18 안전한 '길' 조성을 위한 범죄 안전성 평가 연구	김연진 ;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v.33 n.1
19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단독주택지 외부공간의 CPTED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김아람 ; 정성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v.33 n.1
20 3차원 공간분석 및 가상활동객체를 활용한 범죄예측에 관한 기초연구	장경란 ; 정성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v.33 n.1
21 공동주택의 범죄예방설계를 위한 실제적 환경구축에 관한 연구	박정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v.33 n.1

## 이슈와 연구동향 #9

제목	저자	수록지	연도만	권호
22	초등학교 교육환경의 범죄안전 환경계획방안에 관한 연구	변기동 ; 하미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13 v.22 n.2(통권 97호)
23	CPTED와 빛공해 방지법의 조망기준 비교 연구	안지혜 ; 한정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제15권 1호
24	지역사회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범죄 예방을 위한 집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및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김민경	대한범죄학회 · 한국셉테드학회 · 한국범죄비행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2013
25	주택유형별 1인가구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	황성은 ; 강부성 ; 박지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3 v.24 n.4
26	범죄발생의 공간의존성 변화와 핫스팟 분포, 2001-2010	김현중 ; 이성우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2013 v.11 n.2(통권 21호)
27	보행안전과 범죄예방을 고려한 초등학교 주변 위험도 평가연구	강석진 ; 강규진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v.33 n.2
28	주거지역 범죄유발환경요인이 주택의 내재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종훈 ; 유승규 ; 김주형 ; 김재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 v.29 n.10
29	학교에서의 범죄불안감 유발 요인 도출 및 시설개선을 통한 범죄불안감 저감 방안 연구	백혜미 ; 김동현 ; 정성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 v.29 n.11
30	CPTED이론을 적용한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기초연구	김부영 ; 손기영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 기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13 v.13 n.2(통권 제25호)
31	범죄다발지역의 도시 환경적 영향요인 분석	허선영 ; 문태현	국토계획	2013 v.48 n.6(통권 201호)
32	Ray-Trac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CCTV배치 평가시뮬레이션	김석태 ; 안상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13 v.22 n.6(통권 101호)
33	건축부문의 건설경기와 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허지연 ; 구동환 ; 정창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 v.29 n.12
34	주택유형과 범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박승훈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2013 v.1(총계)
35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거주자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윤혜 ; 이유미 ; 이윤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13 v.15 n.06 (통권58호)
36	마을 만들기를 위한 거주민들의 안전성 인식 조사연구	박소윤 ; 이현수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2013 v.2(추계)
37	아파트 단지 내 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김태욱 ; 최임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 v.2013 n.01
38	대학 캠퍼스 내 야간 보행 환경에 대한 여대생들의 성범죄 피해 불안감 연구	고지영 ; 이유미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3 v.4 n.1
39	CPTED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강석진 ; 손원진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3 v.4 n.2
40	여성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골목길의 물리적 환경 요소 연구	송정화 ; 오건수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3 v.4 n.2
41	아동 · 청소년 성범죄의 물리적 도시환경 영향요인 분석	이현지 ; 정성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 v.28 n.01
42	공동주택 범죄예방설계 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	이경훈 ; 강석진 ; 김정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 v.28 n.02



제목	저자	수록지	연도만	권호
43 CPTED 관점에서 안전한 대학교캠퍼스를 위한 적용요소 연구	윤소진 ; 이승재 ; 강석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	v.28 n.03
44 금융위기 전후 지역 범죄발생 원인의 구조적 변화 분석	이창근 ; 김의준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12	v.25 n.1
45 '방문빈도'를 고려한 시각적 노출량 모델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박근송 ; 이상현 ; 박인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	v.28 n.04
4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학생 교실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박혜선 ; 하미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12	v.21 n.3(통권 92호)
47 Defining the Patterns and Factors of Urban Crime in Korean C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Social Statistical Data	장동국 ; 심재춘 ; 박주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2	v.14 n.2
48 대중교통 환승주차장의 CPTED 체크리스트에 의한 범죄위험 평가연구	김대용 ; 김태용 ; 박현호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	2012	
49 학교안전을 위한 CPTED가이드라인과 아동이 느끼는 범죄불안감간의 상관관계 연구	백혜미 ; 정성원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	2012	
50 고등학교 교육시설의 배치에 따른 학생들의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	변기동 ; 하미경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	2012	
51 범죄 두려움 감소를 위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계획 연구	박소현 ; 오건수 ; 송정화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	2012	
52 주거유형별 살인 및 절도사건 발생 위험도 비교 연구	황성은 ; 강부성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	2012	
53 노후주거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연구	강석진 ; 이승재 ; 이경훈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	2012	
54 CPTED 원리를 적용한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현 ; 조경수 ; 송정화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	2012	
55 공동주택단지의 보안시스템 적용 현황에 관한 연구	이경훈 ; 강석진 ; 박소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	v.28 n.08
56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도시 주거지 방범용 CCTV 배치 방법에 관한 연구	이승재 ; 강석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	v.28 n.09
57 범행 장소와 공간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은석 ; 최재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	v.32 n.2
58 CPTED 요소의 GIS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초연구	이중훈 ; 유승규 ; 김주형 ; 김재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	v.32 n.2
59 범죄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외부공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곽보윤 ; 변기동 ; 박세연 ; 하미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	통권23호
60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입지 유형화에 관한 연구	변기동 ; 박세연 ; 곽보윤 ; 하미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	통권23호
61 주거환경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신우화 ; 신우진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2012	v.10 n.3(통권 19호)
62 노후 주거지역에서 CPTED를 통한 범죄예방 연구	강석진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2	v.3 n.1
63 지역의 주거 안정이 청소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백승엽 ; 이주락 ; 박현호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2	v.3 n.1

## 이슈와 연구동향 #9

제목	저자	수록지	연도만	권호
64 아동안전지도 제작 교육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박정은 ; 이경훈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2	v.3 n.1
65 CPTED 적용을 통한 안전한 초·중등학교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완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2	v.3 n.2
66 아파트단지 외부공간 CPTED의 연구동향	Jia-Yan Yun ; 김충식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2	v.3 n.2
67 주거단지의 범죄예방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하미경 ; 변기동 ; 이효창 ; 김영국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2	v.3 n.2
68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실효성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김상희 ; 김주현 ; 황희연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1	v.12 n.1(통권 제43호)
69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연구	강석진 ; 박미량	교육시설(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1	v.18 n.4
70 도시의 물리적 환경특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구지연 ; 김기호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1	v.12 n.5(통권 제47호)
71 도시내 범죄발생과 범죄 두려움 위치의 공간적 차이 분석	허선영 ; 문태현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011	v.14 n.4
72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위한 학교 공간 우선순위	박성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	v.27 n.1
73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재은 ; 정윤남 ; 김세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	v.27 n.3
74 고등학교 시설의 친인간적 교육환경 계획에 관한 기초 연구	이제화 ; 노대건 ; 변기동 ; 이효창 ; 하미경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v.31 n.1(계획계)
75 고등학교에서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공간별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	노대건 ; 이제화 ; 변기동 ; 이효창 ; 하미경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v.31 n.1(계획계)
76 공동주택단지의 범죄 예방 설계를 위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이유미 ; 임동현 ; 강부성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1	v.22 n.4
77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범죄예방성능 평가	이상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	v.27 n.8
78 도시공원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강용길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1	v.2 n.1
79 주거기간 및 주택유형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박미량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1	v.2 n.1
80 대학교 캠퍼스의 범죄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이효창 ; 하미경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1	v.2 n.1
81 문화재 범죄 관련 법 제도의 한계와 그 보완에 관한 연구	김종현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1	v.2 n.1
82 일본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례연구	김걸 ; 김병선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1	v.2 n.1
83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요소 기대효과와 적용방안	박성철 ; 김진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	v.27 n.10
84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의 CPTED 기법 적용성에 관한 연구	이해주 ; 강석진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v.31 n.2(계획계)

제목	저자	수록지	연도만	권호
85 범죄피해대상 중심의 최적 감시위치 선정에 관한 연구	이승재 ; 강석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	v.27 n.12
86 주거지 내 초등학교의 범죄안전성 분석과 계획방안	김리원 ; 양우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1	v.22 n.6
87 CPTED 관점에서 초등학교의 방범환경 평가 연구	강석진 ; 이경훈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1	v.2 n.2
88 CPTED 관점에서의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정책 사업' 고찰	박현호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1	v.2 n.2
89 도시설계 요인과 재산범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박승훈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0	v.11 n.3(통권 제40호)
90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정일훈 ; 양진석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010	v.17 n.4
91 주거단지 방범환경설계기법을 이용한 통합적 방범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김미연 ; 구원용 ; 최진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	v.26 n.03
92 주거지역 생활권 공원 범죄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이용자 의식에 관한 연구	노대건 ; 박정아 ; 하미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통권18호
93 범죄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거단지 진출입 공간의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이제화 ; 원선영 ; 하미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통권18호
94 아파트단지에서 CPTED 구성요인과 범죄 및 불안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정은 ; 강석진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	v.26 n.05
95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 캠퍼스 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유호정 ; 박은경 ; 하미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	v.26 n.08
96 범죄불안감 감소를 위한 대학 도서관 환경계획요소의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정호 ; 박은경 ; 이효창 ; 하미경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97 대학 도서관의 범죄 불안감과 공간 계획 요소에 대한 연구	이소연A ; 최소희 ; 하미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0	v.10 n.5(통권 45호)
98 범죄의 공간적 발생패턴 및 분포특성	허선영 ; 문태현	국토계획	2010	v.45 n.5(통권 179호)
99 범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집합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배치방법	김리원 ; 양우현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2010 v.2(추계)
100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박승훈	국토계획	2010	v.45 n.6(통권 180호)
101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공동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정윤희 ; 이유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	v.26 n.12
102 CPTED: 범죄학과 건축학의 통섭적 결합	이창무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1
103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nd Related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Matthew Robinson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1
104 CPTED 연구 및 적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	강석진 ; 이경훈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1
105 한국형 셉테드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박경래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1
106 CPTED 원리 기반, GIS활용 '도시 범죄예방 CCTV 시스템' 구축 모델 개발 연구	도인록 ; 표창원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1

## 이슈와 연구동향 #9

제목	저자	수록지	연도만	권호
107 공동주거단지의 CPTED적용을 위한 사례분석 연구	신태택 ; 반상철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v.2010 n.01
108 주거지 재생사업에 따른 범죄변화 분석	박창지 ; 백승인 ; 이제선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2
109 대학캠퍼스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강용길 ; 표창원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2
110 국내 · 외 선행연구를 통한 CPTED 범죄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임동현 ; 이유미 ; 강부성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2
111 방범용 CCTV 정책의 평가와 한계	송봉규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2
112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요소 적용 우선순위 분석	박성철 ; 조동현 ; 김진욱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계)	2010	v.1 n.2
113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사례분석을통한도시재생에서의적용방안연구	강석진 ; 배정운 ; 윤소정 ; 이경훈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14 공동주거단지의 범죄취약 공간 분석	성기호 ; 박인환 ; 김홍규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09	v.10 n.2(통권 제35호)
115 도시재생에 적용된 범죄예방기법에 관한 연구	정윤남 ; 이간원 ; 김세용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09	v.10 n.3(통권 제36호)
116 블록별 토지이용에 따른 강절도 범죄발생 특성 연구	배응규 ; 김희재 ; 권경오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09	v.10 n.4(통권 제37호)
117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의 범죄불안감과 조명계획에 관한 연구	김대진 ; 이효창 ; 김나연 ; 하미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9	v.25 n.01
118 아파트 단지 범죄불안감 감소를 위한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원선영 ; 김나연 ; 이효창 ; 하미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9	v.25 n.02
119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주거지역 방범용 CCTV 효과성 분석	강석진 ; 박지은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9	v.25 n.04
120 창호용 방충망의 성능기준 개선 방안	여인환 ; 옥치열 ; 안재홍 ; 인기호 ; 민병렬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기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09	v.9 n.1(통권 제16호) – 산업계
121 여성의 범죄불안을 대비한 지하주차장 공간계획 연구	이금희 ; 김남효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제 11권 1호
122 주거지역 방범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재은 ; 김세용 ; 정윤남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2009 v.1(춘계)
123 도시범죄발생의 시 · 공간적 분포 패턴 및 범죄발생율과 공간 구조적 특성과의 관계	허선영 ; 문태현 ; 정경석 ; 박광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제3회
124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에 관한 연구	최광모 ; 송정화 ; 오건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25 아파트 단지 주차장 범죄취약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최동식 ; 강석진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제목	저자	수록지	연도만	권호
126 근린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송은주 ; 송정화 ; 오건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27 공동주택 입면디자인에 CPTED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이수원 ; 송정화 ; 오건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28 공동주택단지 옥외근린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연구	신혜미 ; 송정화 ; 오건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29 공동주택단지의 CPTED 기법 적용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 연구	박정은 ; 강석진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30 창호용 방충망의 안전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옥치열 ; 안재홍 ; 여인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31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방안 실증분석	한형수 ; 유재인 ; 함주영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2009	v.7 n.2(통권 12호)
132 여성의 범죄불안심리를 고려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계획 연구	이금희 ; 김남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9	v.18 n.6(통권 77호)
133 신도시계획의 계획지표를 반영한 U-City의 U-방범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윤효진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09	v.29 n.5-D
13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예비적 고찰	이제선 ; 박현호 ; 오세경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8	v.20 n.2
135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	이은혜 ; 강석진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8	v.24 n.2
136 공동주택단지에서의 범죄피해경험율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성(safety) 평가 지표간의 상관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유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8	v.19 n.2
137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김대진 ; 이효창 ; 홍동진 ; 하미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제 10권 1호
138 아파트 단지 만족도와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	원선영 ; 김나연 ; 하미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통권14호
139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의 범죄불안감 예방을 위한 조명계획에 관한 연구	김대진 ; 이효창 ; 김나연 ; 하미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통권14호
140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평가 지표와 범죄불안감간의 상관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유미 ; 백혜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8	v.24 n.10
141 거주성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거주지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리송준 ; 이상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142 공동주택단지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적용성 연구	강석진 ; 이승재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143 주거 단지 범죄 불안감 예방을 위한 거주자 의식 조사 연구	박정아 ; 이효창 ; 김대진 ; 원선영 ; 김성준 ; 하미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통권15호
144 도시안전맵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기존 웹사이트 분석연구	임동현 ; 김현수 ; 김진욱 ; 강부성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2008 v.2(추계)
145 근린에서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고찰	고준호	대한지리학회지	2007	v.42 n.2



## 이슈와 연구동향 #9

제목	저자	수록지	연도만	권호
146 GIS를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	전재한 ; 권재현 ; 양효진	지형공간정보	2007	v.15 n.1
147 비성별적(非性別的) 도시의 모색 : 도시환경요소가 주는 잠재적 범죄위협에 대한 여성인식의 고찰	김홍순	국토계획	2007	v.42 n.1(통권 154호)
148 게이트드 커뮤니티의 단지환경적 특성 및 범죄안전성에 관한 연구	김석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7	v.23 n.6
149 도시주거지역에서의 근린관계 활성화를 통한 방범환경조성에 대한 연구	강석진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7	v.23 n.7
150 범죄피해경험율과 범죄로부터의 안정성(safety)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	이유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7	
151 공간분석 기법에 기초한 주거지역 공간특성과 주거침입범죄와의 관계분석	이만형 ; 김정섭 ; 석해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7	v.23 n.11
152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범죄에 대한 연구	김동근 ; 윤영진 ; 안건혁	국토계획	2007	v.42 n.7(통권 160호)
153 창호면적과 노상범죄의 상관성에 기초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박성민 ; 신재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6	v.22 n.6
154 공동주택단지의범죄로부터안전성평가를위한평가지표선정에관한연구	이유미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155 초고층아파트 공동공간의 범죄불안감 특성 분석	최열 ; 임하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5	v.21 n.7
156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강석진 ; 안은희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5	v.21 n.12
157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의 활성화와 단지내 범죄피해경험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강석진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4	v.20 n.2
158 도시공간구조와 공간범죄	장동국	국토계획	2004	v.39 n.1(통권 133호)
159 공간구문론에 의한 주거지역의 공간침입범죄 해석에 관한 연구	장동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4	v.20 n.3
160 시각적 접근-노출 모델의 재고찰	황용하 ; 최재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3	v.19 n.3
161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최재필 ; 이기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2	v.18 n.3
162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델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최재필 ; 이기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2	v.18 n.4
16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노재형B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2	
164 청주시 도심의 범죄 특성	고준호	대한지리학회지	2001	v.36 n.3
165 일본의 주거지 범죄피해 및 불안감 예방에 관한 연구	최열 ; 손태민 ; 강정은	국토계획	2000	v.35 n.3(통권 108호)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